

공간 계획

1960년대 이후 국토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공간 계획도 많은 변화를 거치며 자리잡아 왔다. 공간 계획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특색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 계획의 수립과 추진,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고 선진화된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 계획의 실행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 계획은 각 시대에 우리 국토가 당면한 과제와

국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 정책의 목표와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1971년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1972~1981)이 수립된 이후, 1981년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1982~1991), 1991년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1992~2001), 2000년 제4차 국토 종합 계획(2000~2020), 2005년과 2011년 제4차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 등의 순으로 수립·시행되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국

토 정책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의 국토 공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흥 도시, 혁신 도시 등 국가 차원의 지역 개발 사업 계획, 시도별 잠재력에 근거한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 발전 5개년 계획, 낙후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한 낙후 지역 발전 계획, 문화적 토양 강화를 위한 문화 국토 발전 계획 등 다양한 지역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도시 계획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현대화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도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주택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였고, 최근에는 도시의 제반 환경 개선과 활력 증진을 위해 도시 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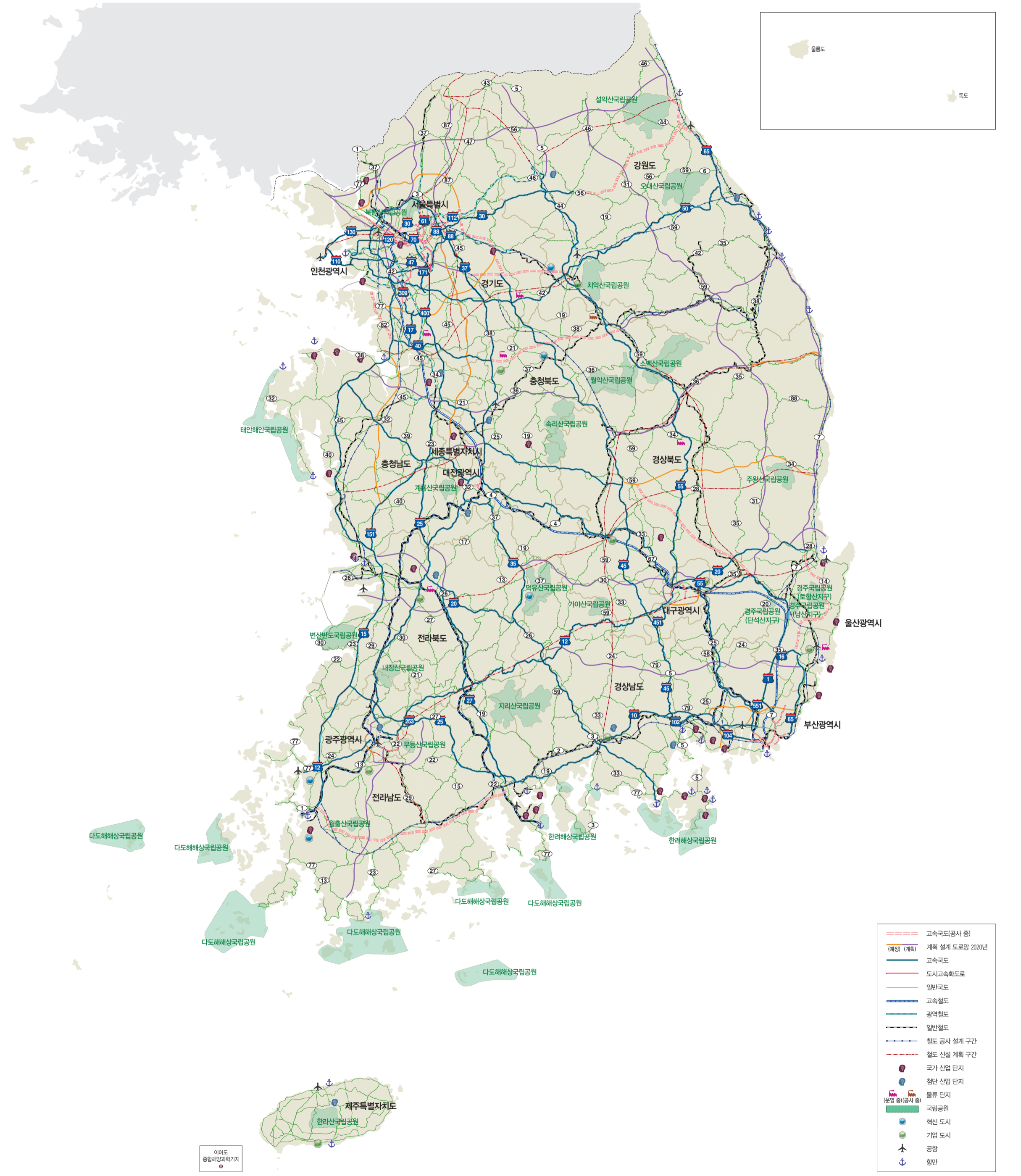
시대별 한국의 경제·사회 여건 및 국토 변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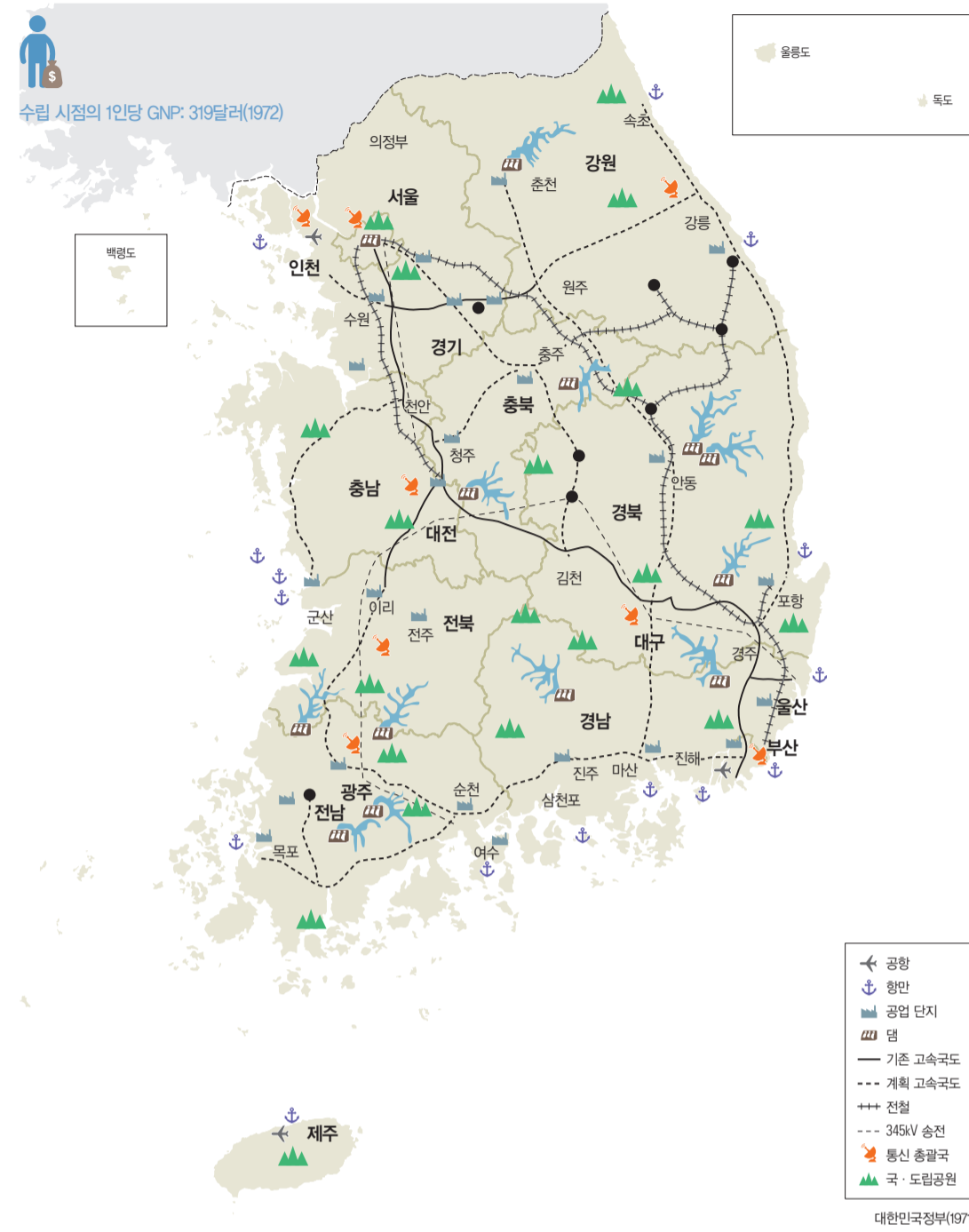
경제	해외 원조의 생산 설비 복구	경제 개발 기반(경공업)	경제 성장기(중화학 공업)	경제 활성화(기계, 전자 산업)	외환 위기 후 안전한 성장(IT 및 융합 기술 산업)	
국토	전쟁 재해 복구 및 수리 사업	산업 기반 시설 및 특정 지역 개발	중화학 공업 도시 성장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 억제, 국토 균형 발전 추진	수도권 분산 및 지역 개발	
교통	교통 시설 복구	고속국도 및 산업철도 건설	국기 기간 교통망 확충 및 도시 지하철 건설	환경 친화적 교통 시스템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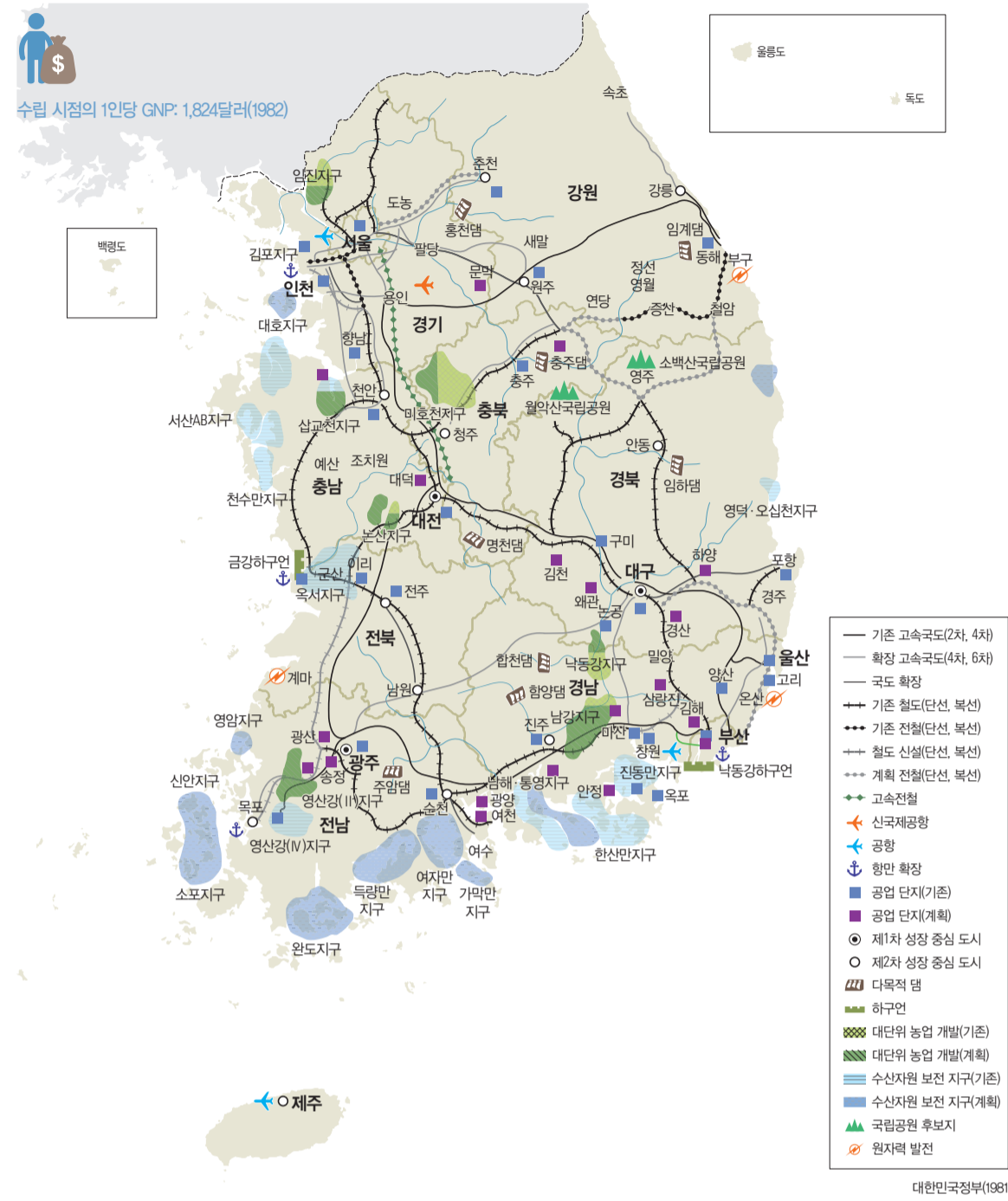
국토 계획 제4차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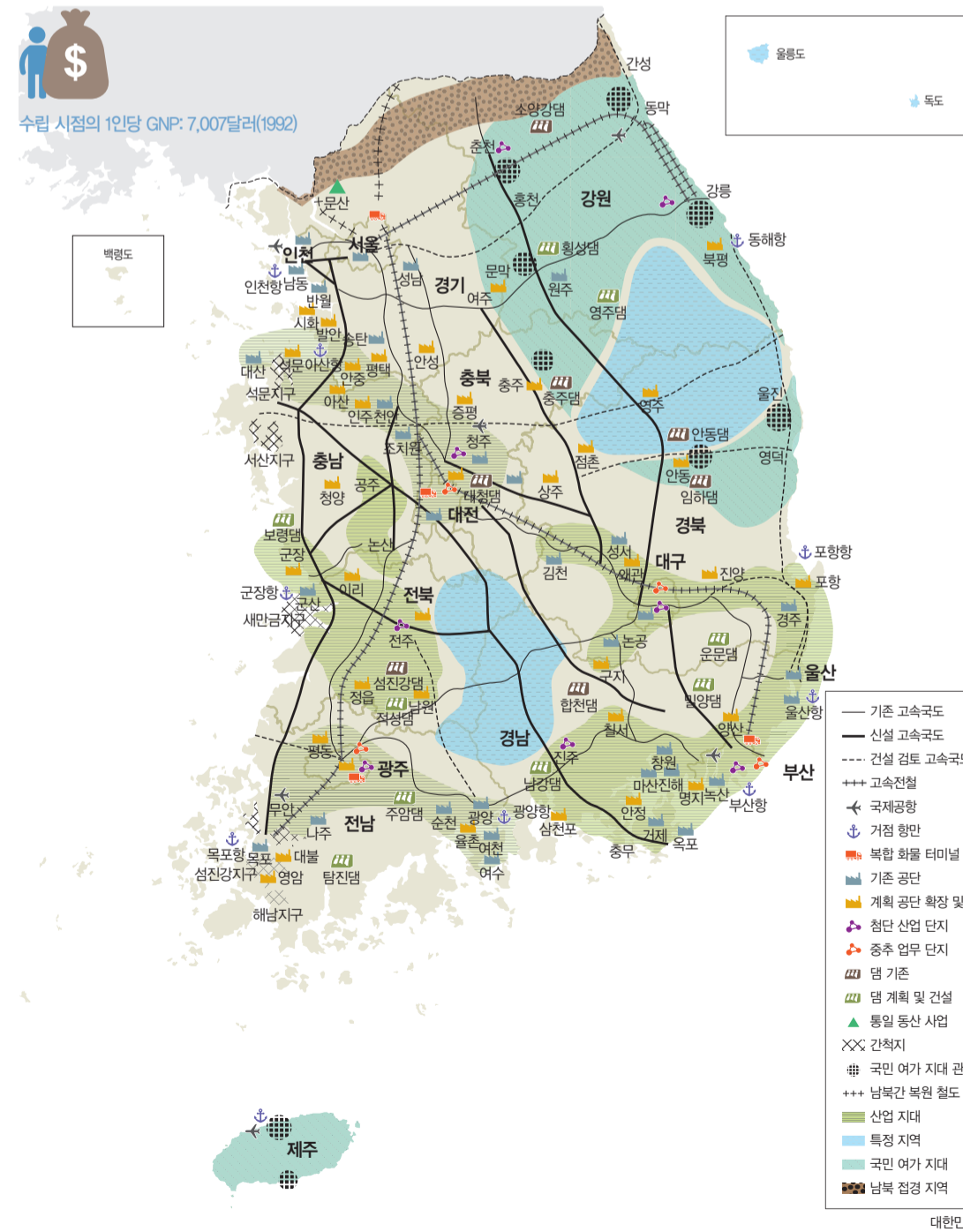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1972~1981)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1982~1991)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1992~2001)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국토 이용 관리의 효율화, 사회 간접 자본 확충, 국토 자원 개발과 자연 보전, 국민 생활 환경의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권역 개발을 통한 집적 이익을 추구하였고, 국가 주도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하였다. 주요 개발 전략 및 정책은 대규모 공업 단지를 개발하고(1970년대 전반기 13개 공업 단지, 후반 27개 중소 산업 단지 조성), 대도시와 각 지역 및 산업 중심지를 연결하는 교통·통신, 에너지 공급망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균형 발전을 목표로 국토의 다핵 구조 형성과 지역 생활권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서울과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을 억제·관리하고 지역 생활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며, 개발 잠재력이 있지만 낙후된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 지원·개발하였다. 국토의 균형 개발 및 인구의 지방 정착 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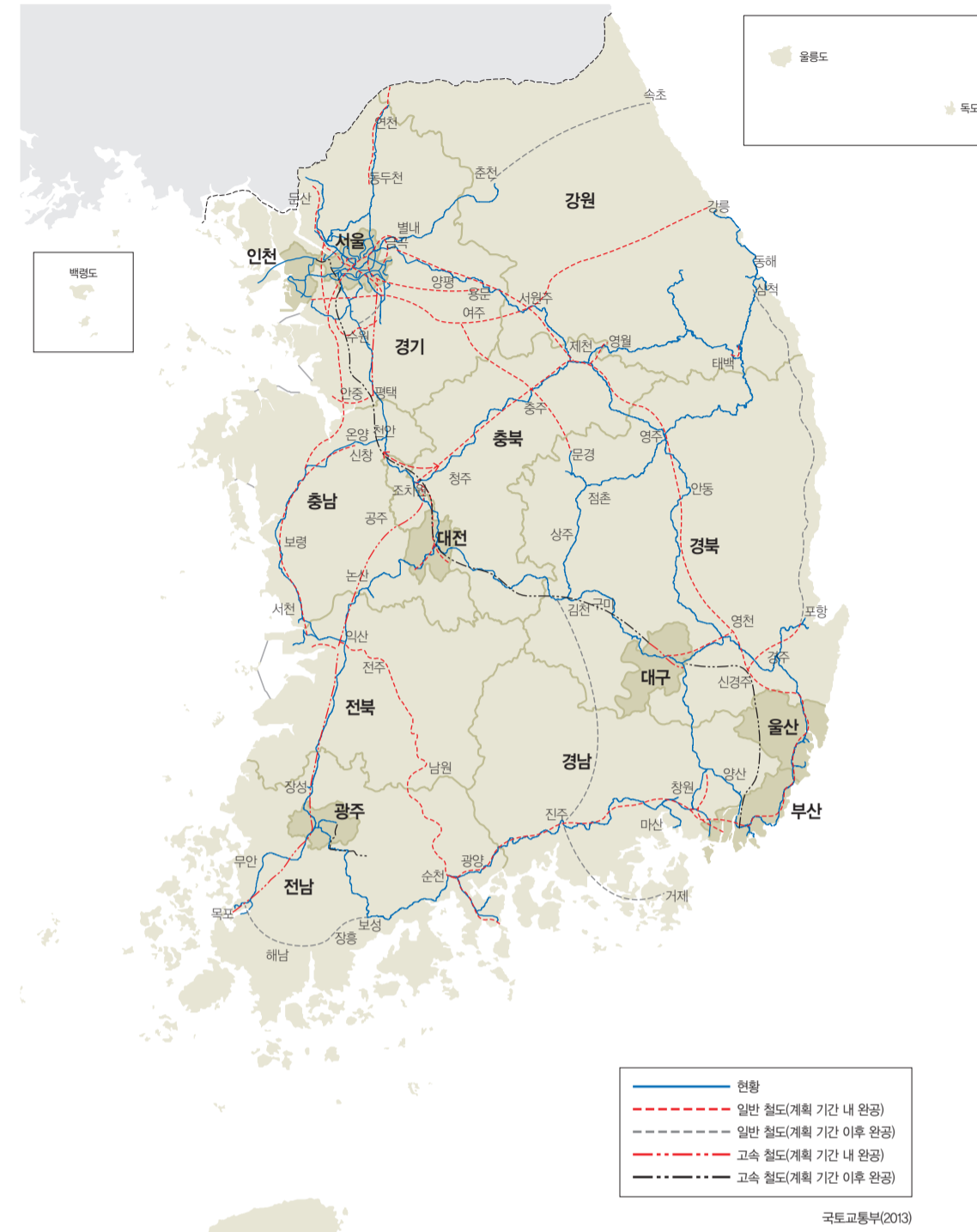
진을 위하여 지역별 성장 잠재력에 입각한 적정 규모의 중소 공업 단지를 지방에 분산 배치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업 지대를 형성하였으며, 기존의 공업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집적 이익과 지역 내 분산을 도모하였다.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특성에 맞는 지역 육성을 통하여 지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구와 산업의 자발적 지방 정착을 유도하였다. 지역 균형을 위해 수도권에 공업 집중 비율을 축소하고, 서해안 지역 등에 신산업 지대를 육성하였으며, 수도권 신규 산업 단지 개발을 억제하고, 대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동남 해안 공업 벨트 산업 구조 고도화, 낙후 지역 중소 공단 개발 추진, 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등에 힘썼다. 또한 대도시와 신산업 지대를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을 확충하고 시설 간 연계 체계를 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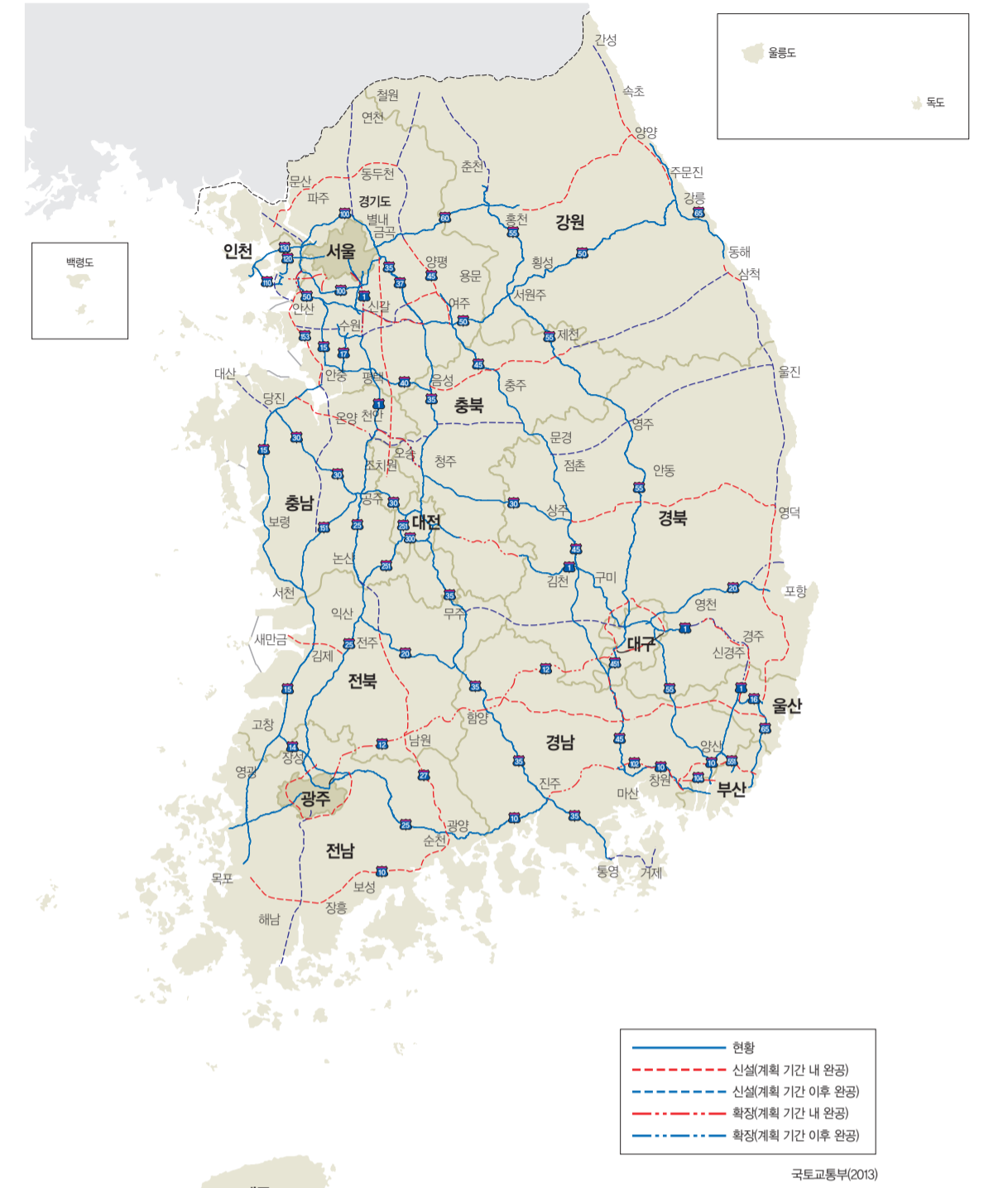
국토 계획의 전개 과정

구분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1972~1982)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1992~2001)	제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2000~2020)	제5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2011~2020)
1인당 GNP	319달러 (1972년)	1,824달러 (1982년)	7,007달러 (1992년)	10,841달러 (2000년, 국민 총소득(GNI))	20,870달러 (2011년, 국민 총소득(GNI))
배경	• 국적 선정 • 공업화 추진	• 국민 생활 환경의 개선 • 수도권 과밀 완화	• 사회 간접 자본 확충 필요 • 지방 지체 저지	• 세계화와 동북아 시대 대비 • 경제와 인구의 안정 성장기	•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 성장 대비 • 글로벌 경쟁 체제 대비
기본 목표	• 국토 이용 관리 효율화 •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 국토 자원 개발과 자연 보전 • 국민 생활 환경의 개선	• 인구의 지방 정착 유도 •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 복지 수준의 제고 • 국토 자연 환경의 보전	•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 생산적 자원 절약적 국토 이용 체계 구축 • 국민 복지 향상과 국토 환경 보전 • 남북 통일 대비 기반 조성	• 계획의 기초 - 21세기 통합 국토의 실현 • 계획의 목표 - 균형 국토, 녹색 국토, 개방 국토, 통일 국토	•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 •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국토 • 품격 있는 매력 국토 •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개발 전략 및 정책	• 대규모 공업 거점의 구축 • 교통 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개발 정비 • 국민 생활을 위한 지역 기능 강화	• 국토의 다핵 구조 형성과 지역 생활권 조성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 교통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 • 후진 지역의 개발 촉진	•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 신산업 지대 조성 • 산업 구조의 고도화 • 통합적 고속 교통망 구축 • 국민 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 증대 • 남북 교류 협력의 개발 관리	• 계획형 통합 국토 육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 환경 조성 • 고속 교통 정비망 구축 • 남북한 교류 협력 기반 조성	• 국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지역 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 공간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 환경 조성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 국토 기반 구축 • 초국경적 국토 경쟁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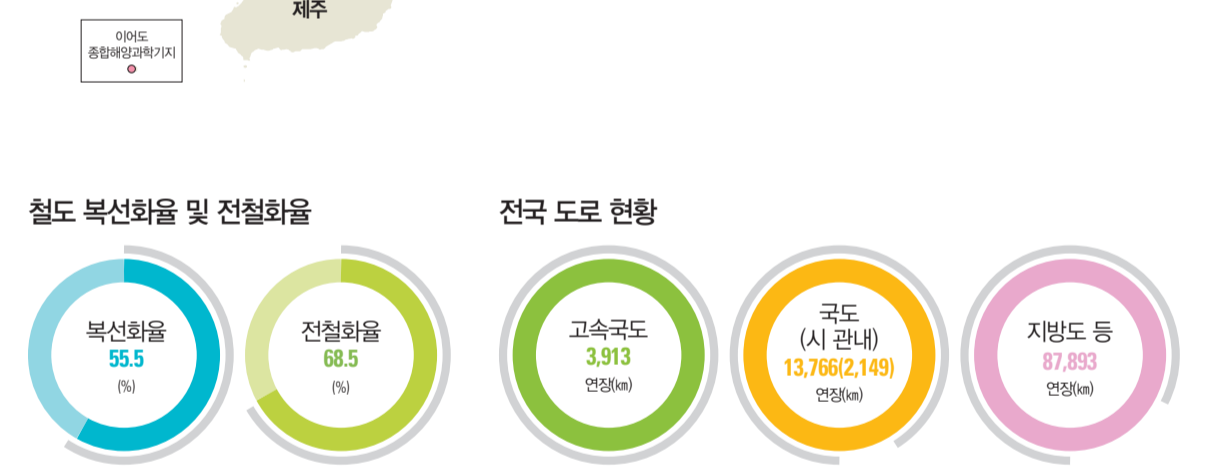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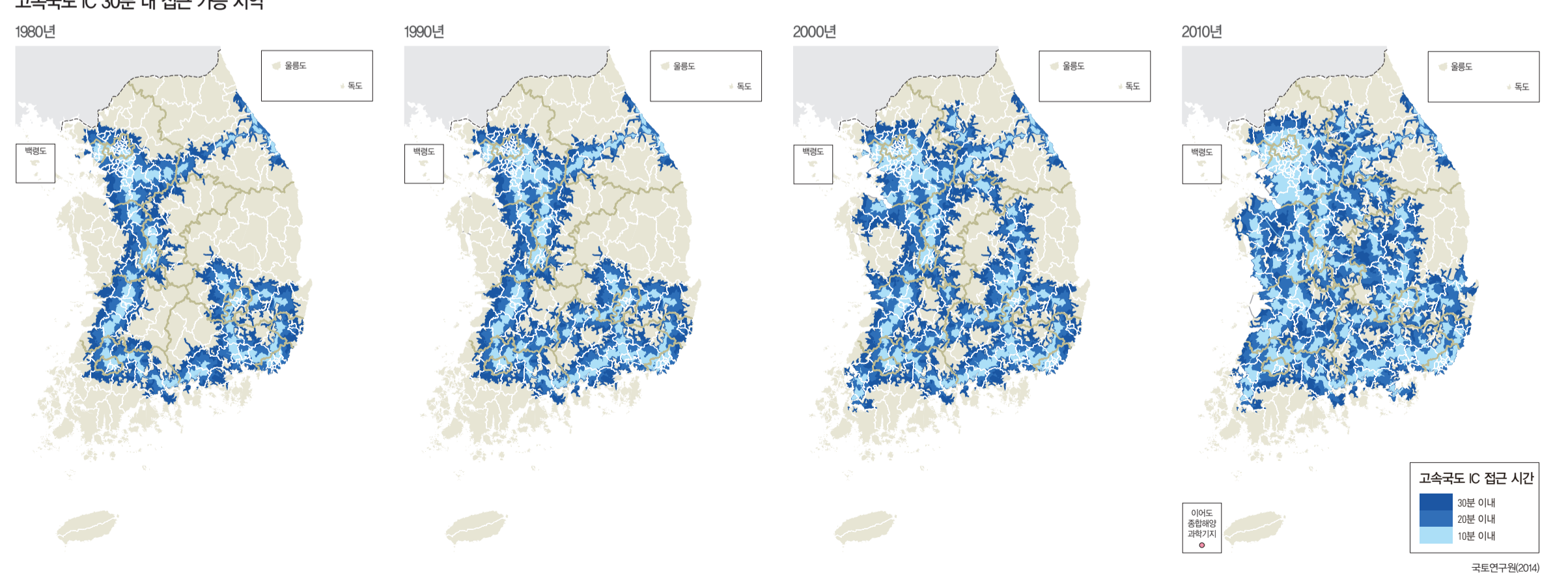
국가 간선 도로망 구축 계획(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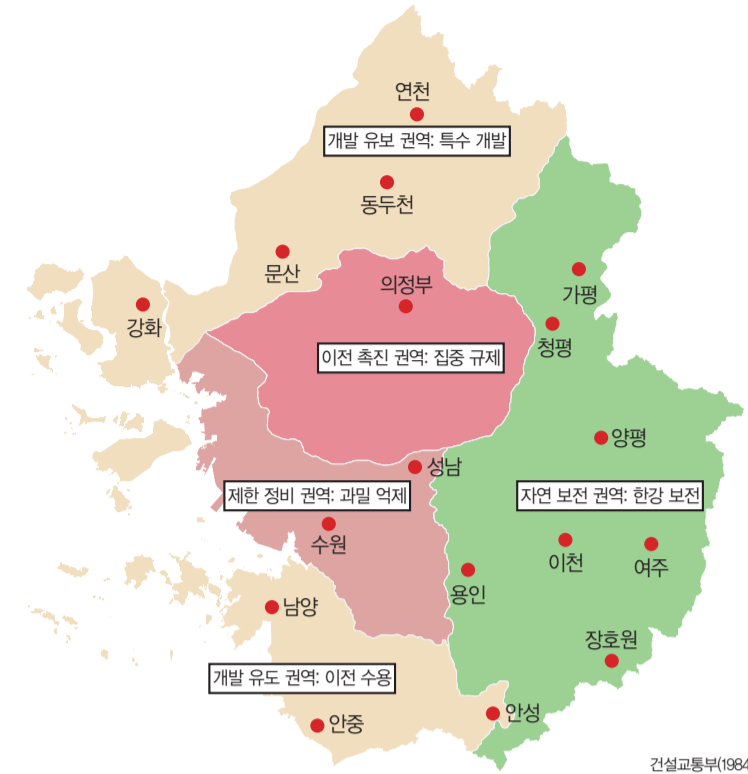
2000년 이전은 교통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연계성 확보, 교통 에로 해소에 주력했다. 이후 현재까지는 교통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균형 개발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통 시설 투자로 국가 기간 교통망 체계의 골격이 형성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수송 능력 증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로의 경우 국가 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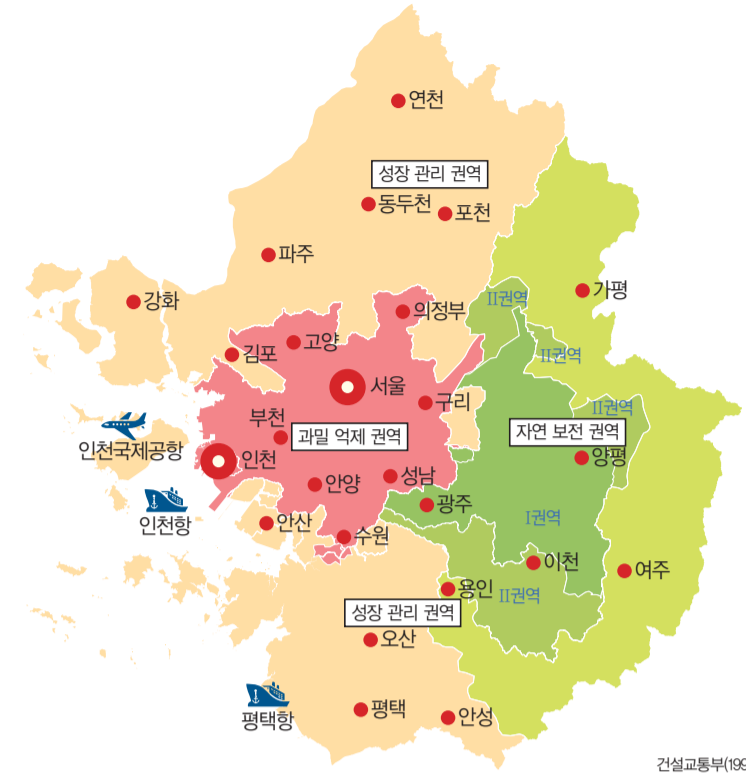
고속국도 IC 30분 내 접근 가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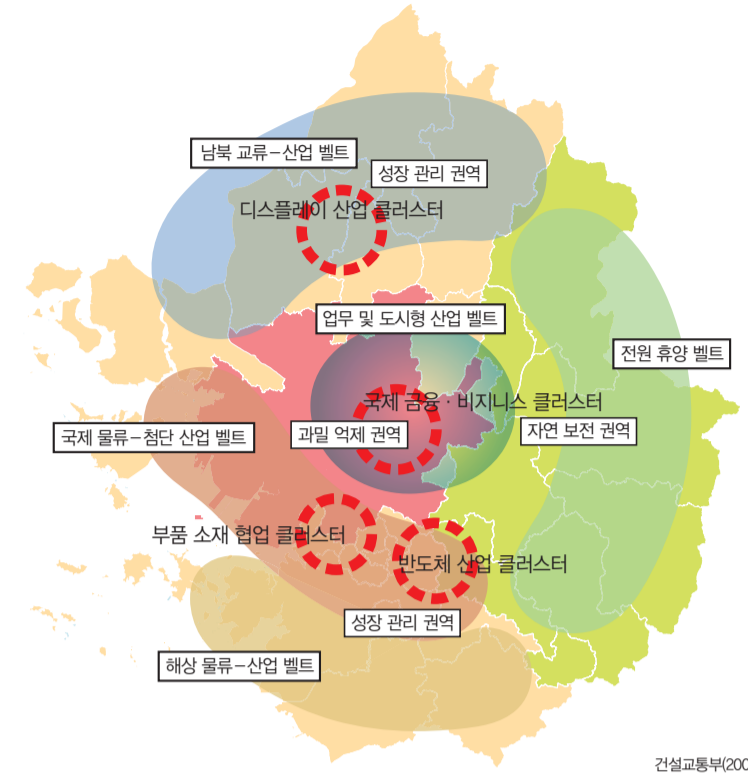
제1차 수도권 정비 계획(1982~1996)



제2차 수도권 정비 계획(1997~2011)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200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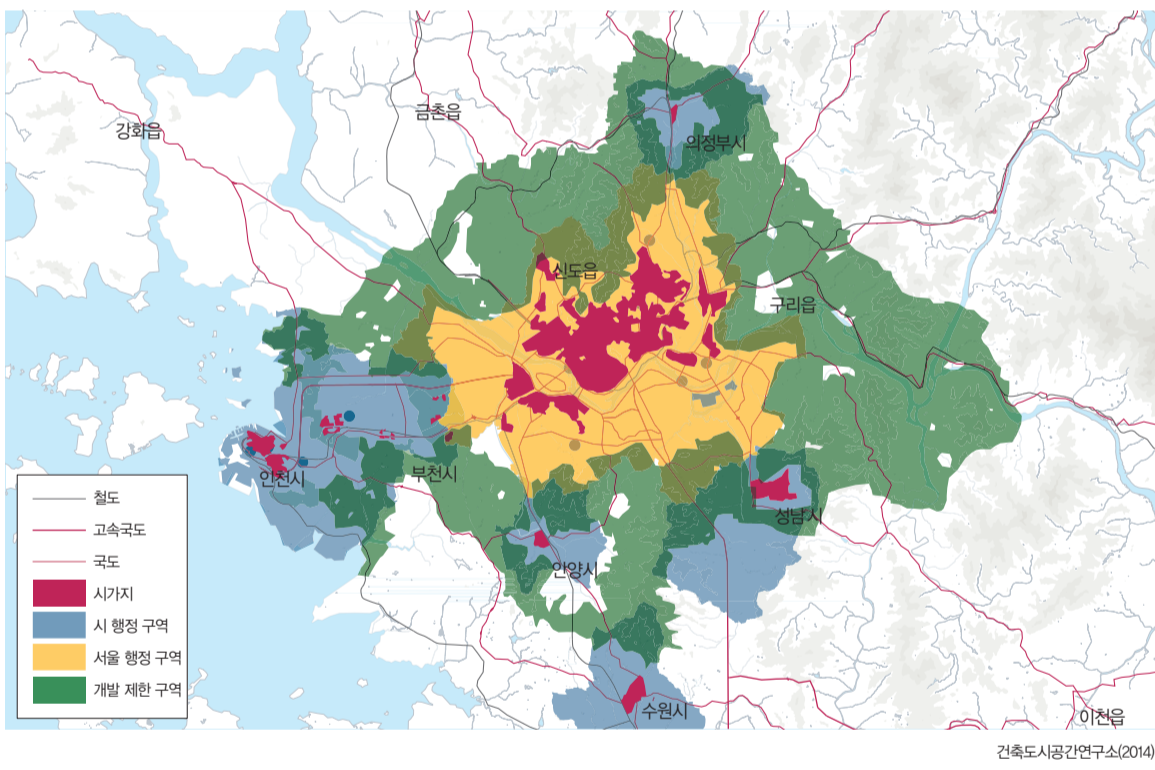
제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도시 간 기능 분담을 통한 다핵적 광역 대도시 생활권을 계획적으로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전 촉진 권역, 제한 정비 권역, 개발 유도 권역, 자연 보전 권역, 개발 유보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전 촉진 권역에 해당하는 서울에 대해서는 단핵 의존의 도시 공간 구조를 다핵 도시 구조로 개편하여 균형적인 도시 발전이

가능하도록 부도심을 형성하는 것을 제정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2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는 1차 계획의 목표 인구 달성 실패에 따른 인구 집중 문제의 해결과 세계화·개방화의 도래, 광역 도시화 등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세계화와 지방화, 통일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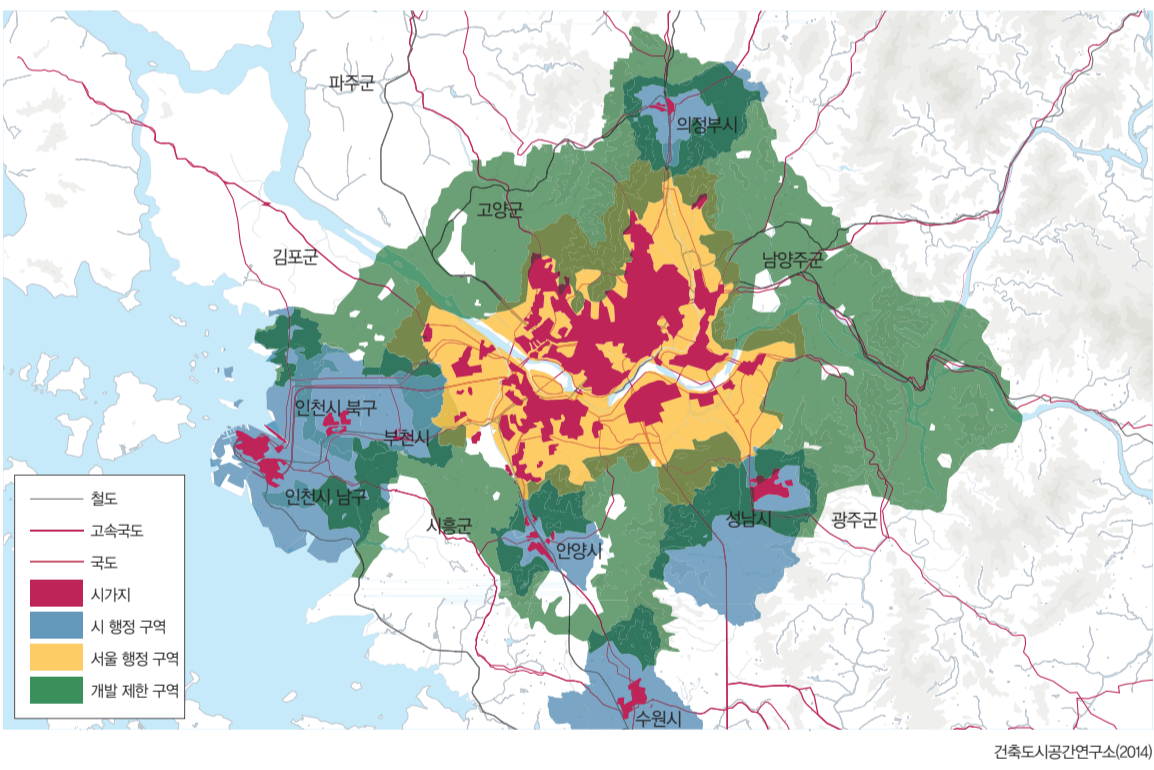
구조의 기틀 마련,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지역 간 적정 수준의 기능 분담 추진을 공간 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축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등의 국내적 여건 변화와 중국의 성장,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로 전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 벨트 구축,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 체계에서 환상 격자형 교통 체계로 전환, 수도권 내 낙후 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 촉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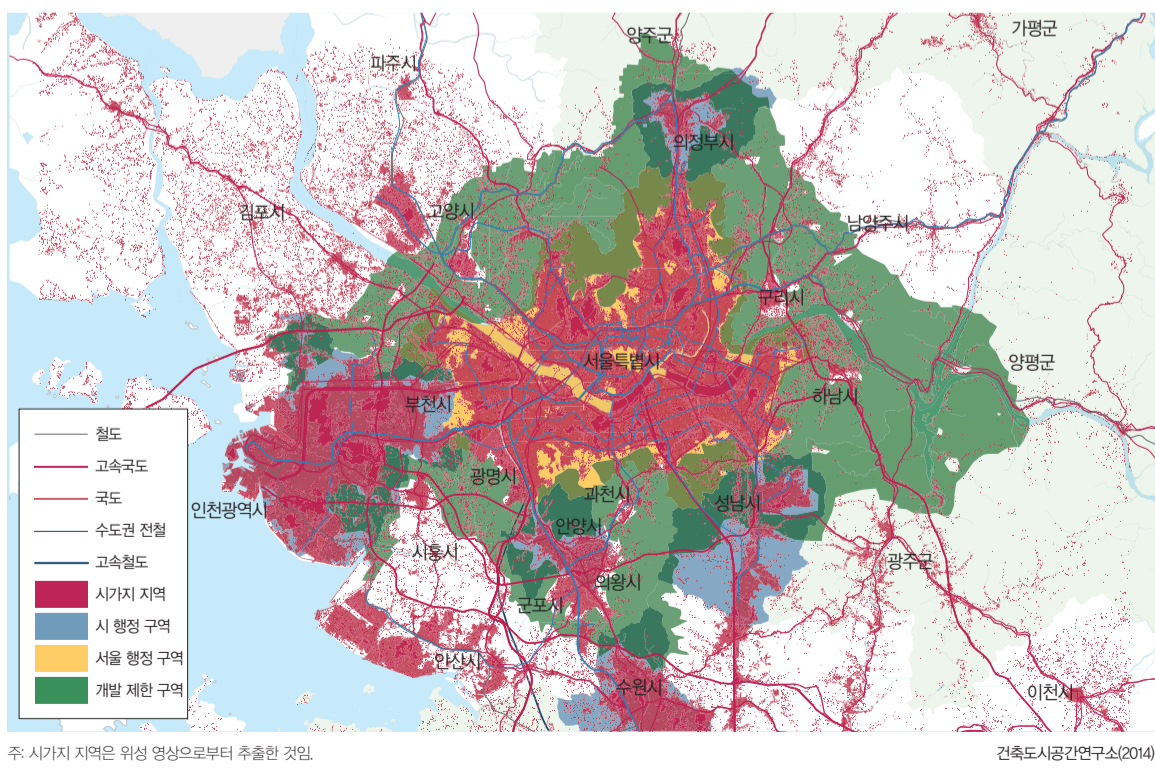
수도권 공간 구조(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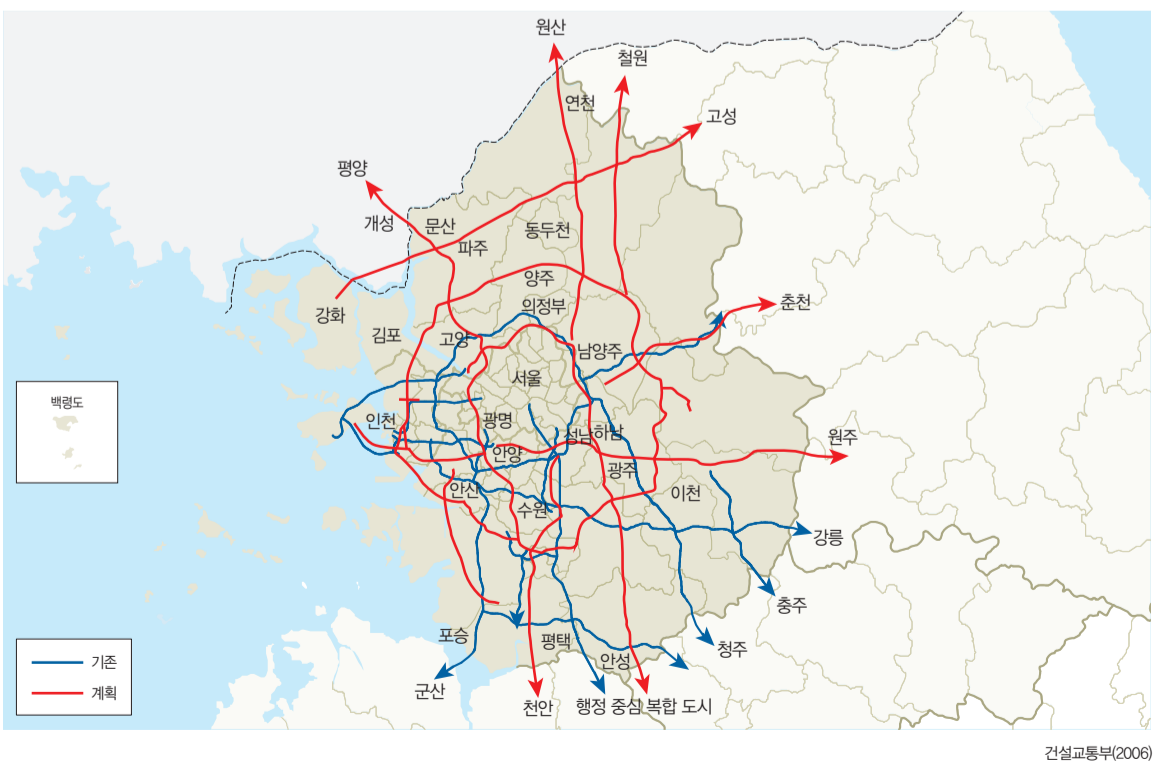
수도권 공간 구조(1980년대)



수도권 공간 구조(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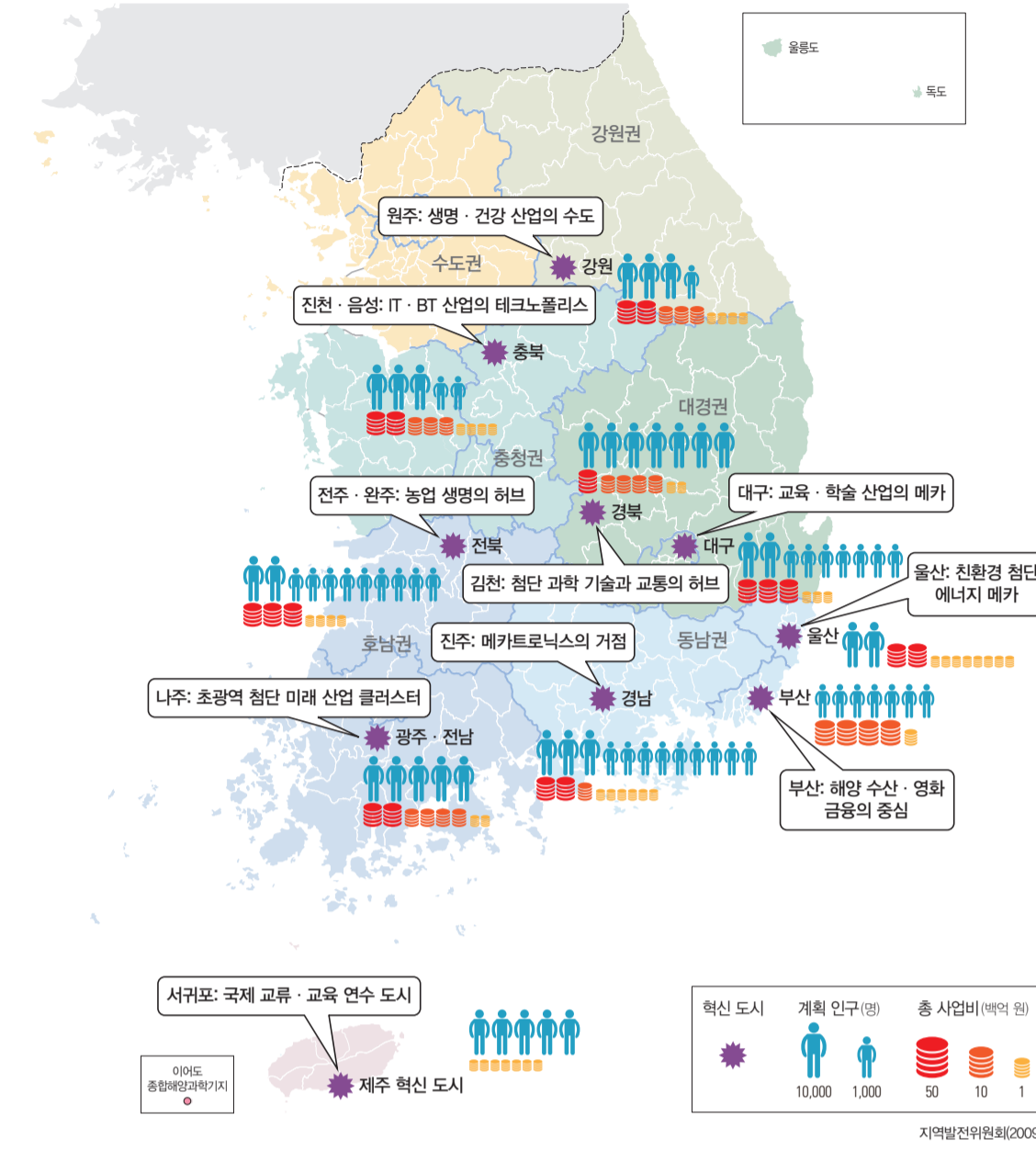


수도권 간선 도로망 구축 현황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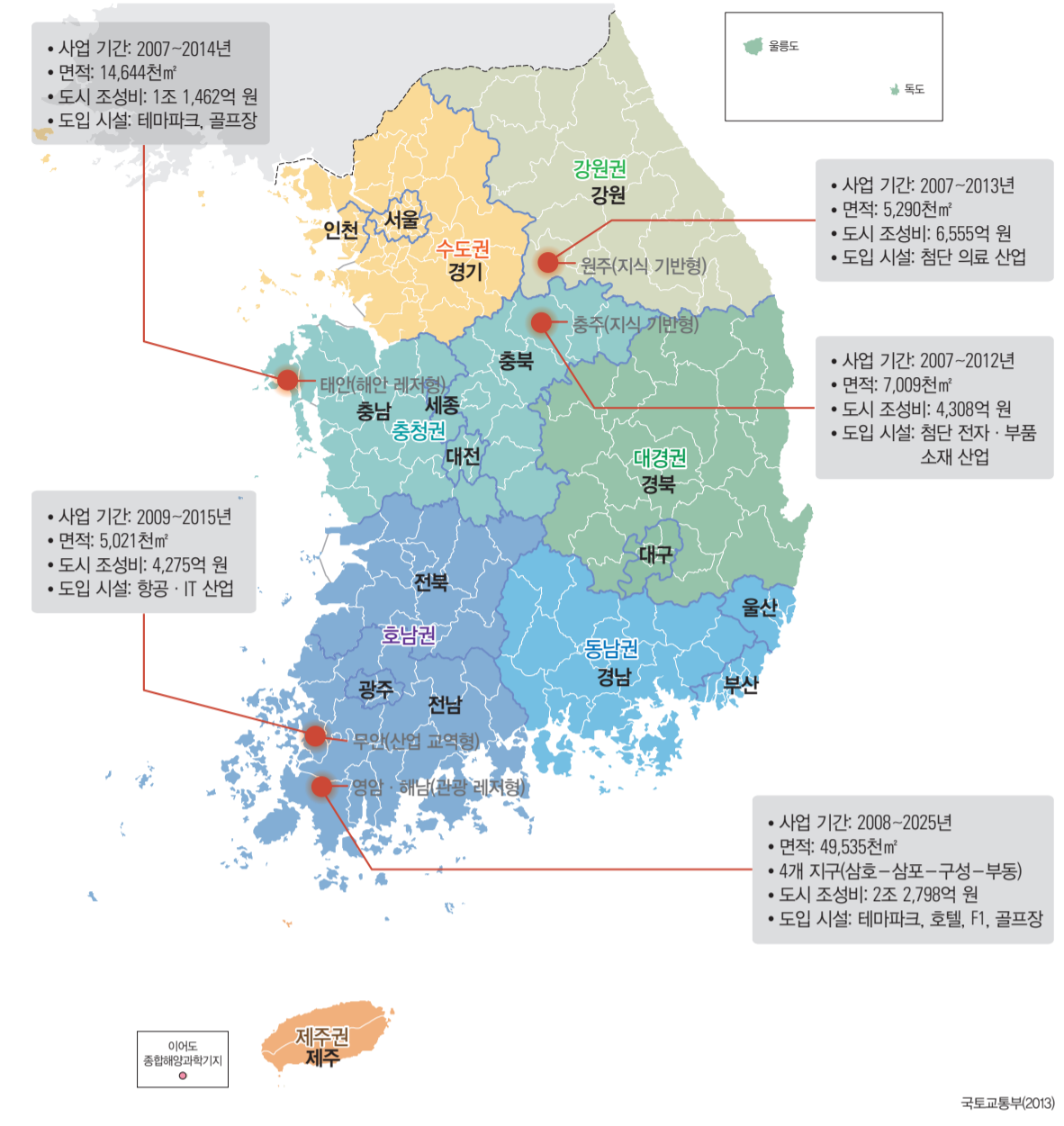


주: 시가지 지역은 위성 영상이므로 추후한 것임.

혁신 도시 현황



기업 도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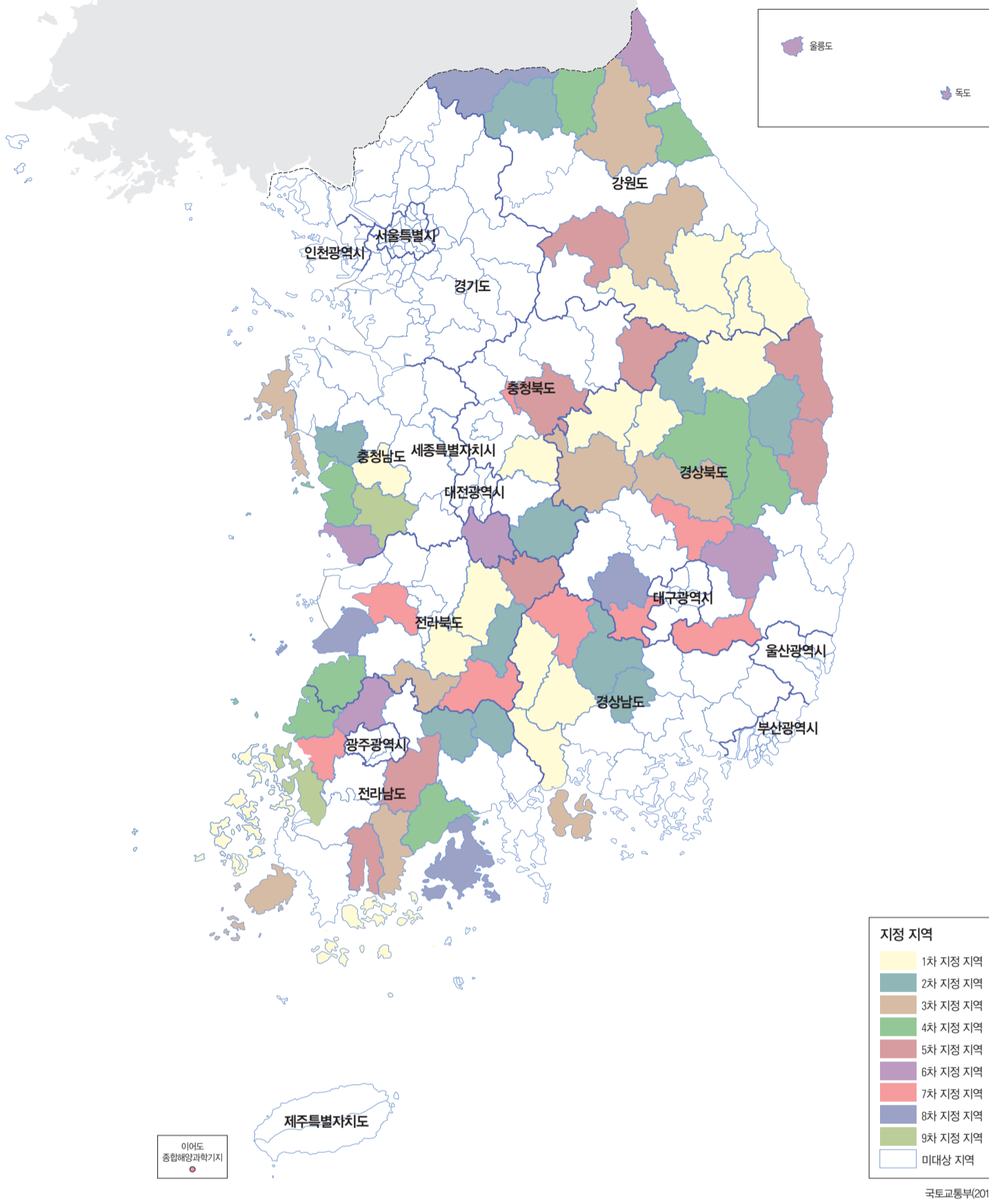
세종시 생활권별 개발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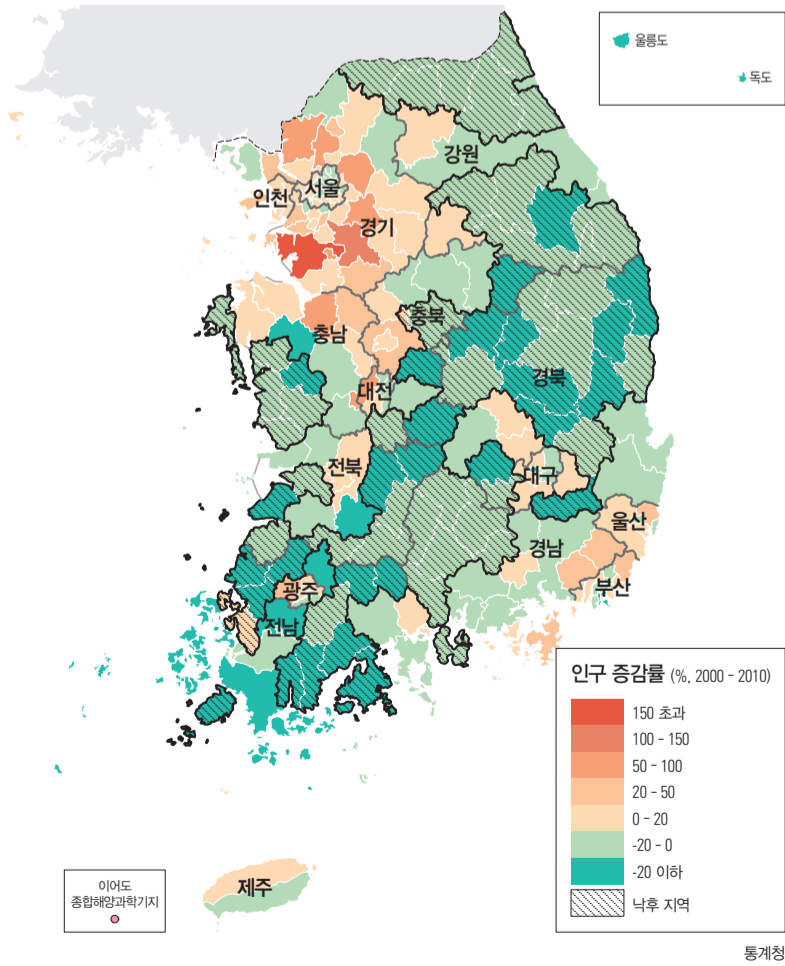
다극 분산형 국토 구조로의 변화를 목표로 2000년 초반에는 국가 균형 발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 분산형 균형 발전의 지역 정책 기조가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 중심 복합 도시, 혁신 도시, 기업 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을 위한 정책이 수행되었다. 2000년 후반에는 지역 경쟁력에 기반한 특화 발전 전략을 지역 정책의 기조로 삼고, 5+2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선도 산업 육성, 인제 양성 등 지역별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민이 정책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기반을 둔 지역 행복 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농어촌 생활권, 도농 연계 생활권, 중추 도시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 자원으로 최적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였다.

지역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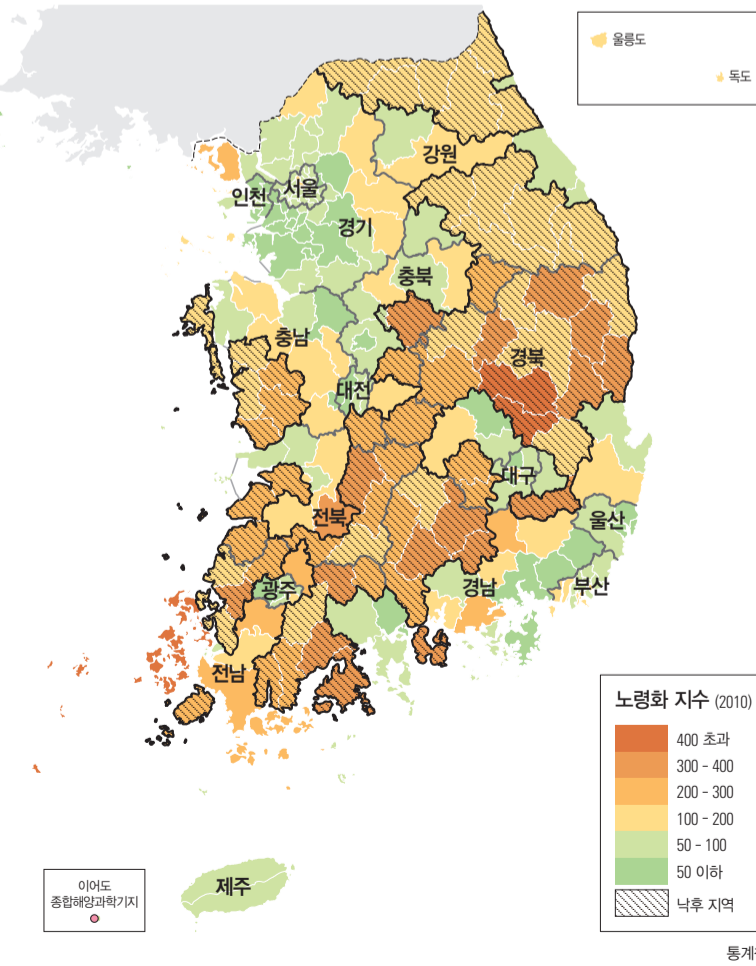
낙후 지역형 개발 촉진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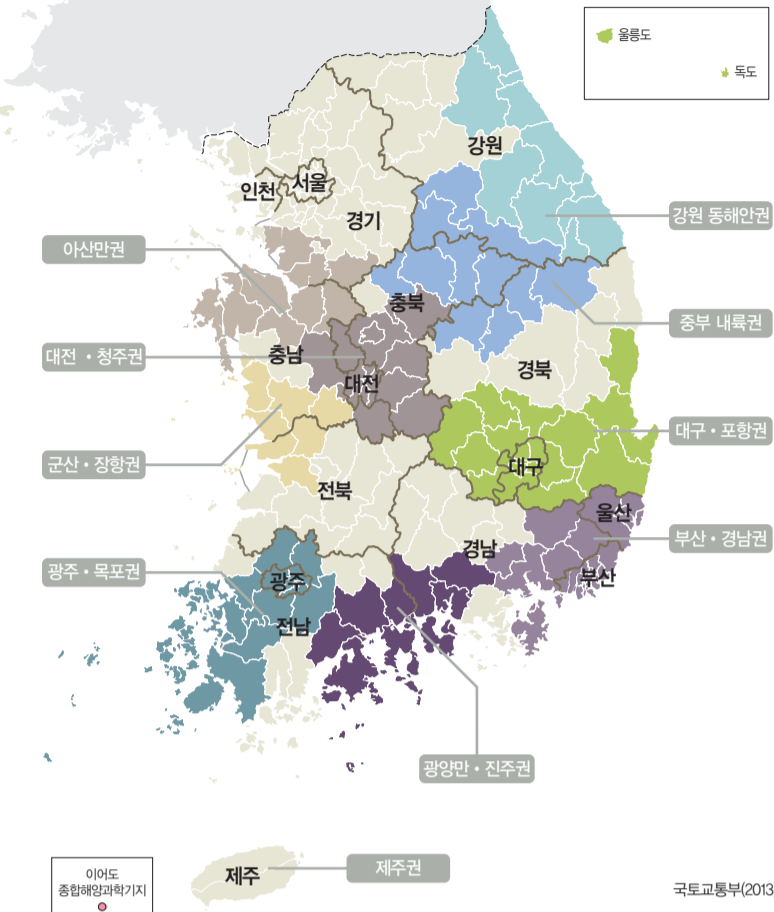
연평균 인구 증가율과 낙후 지역



노령화 지수와 낙후 지역



10대 광역권 지정 현황도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에 대해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소득 기반 및 생활 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발 촉진 지구를 지정하였다. 개발 촉진 지구는 낙후 지역형·균형 개발형·도농 통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낙후 지역형은 전국 시·군의 낙후도를 평가하여 전국 하위 30%에 해당하는 지표가 공통 지표 1개, 특성 지표 1개 이상인 경우 지정하는데, 2013년 7월 현재 52개 지구, 70개 시·군이 지정되었다. 균형 개발형은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아산만 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도농 통합형은 새로운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한편,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인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의 대도시권과 산업권 지대를 수도권에 대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대 광역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낙후 지역형 개발 촉진 지구 지정 현황(2013년 8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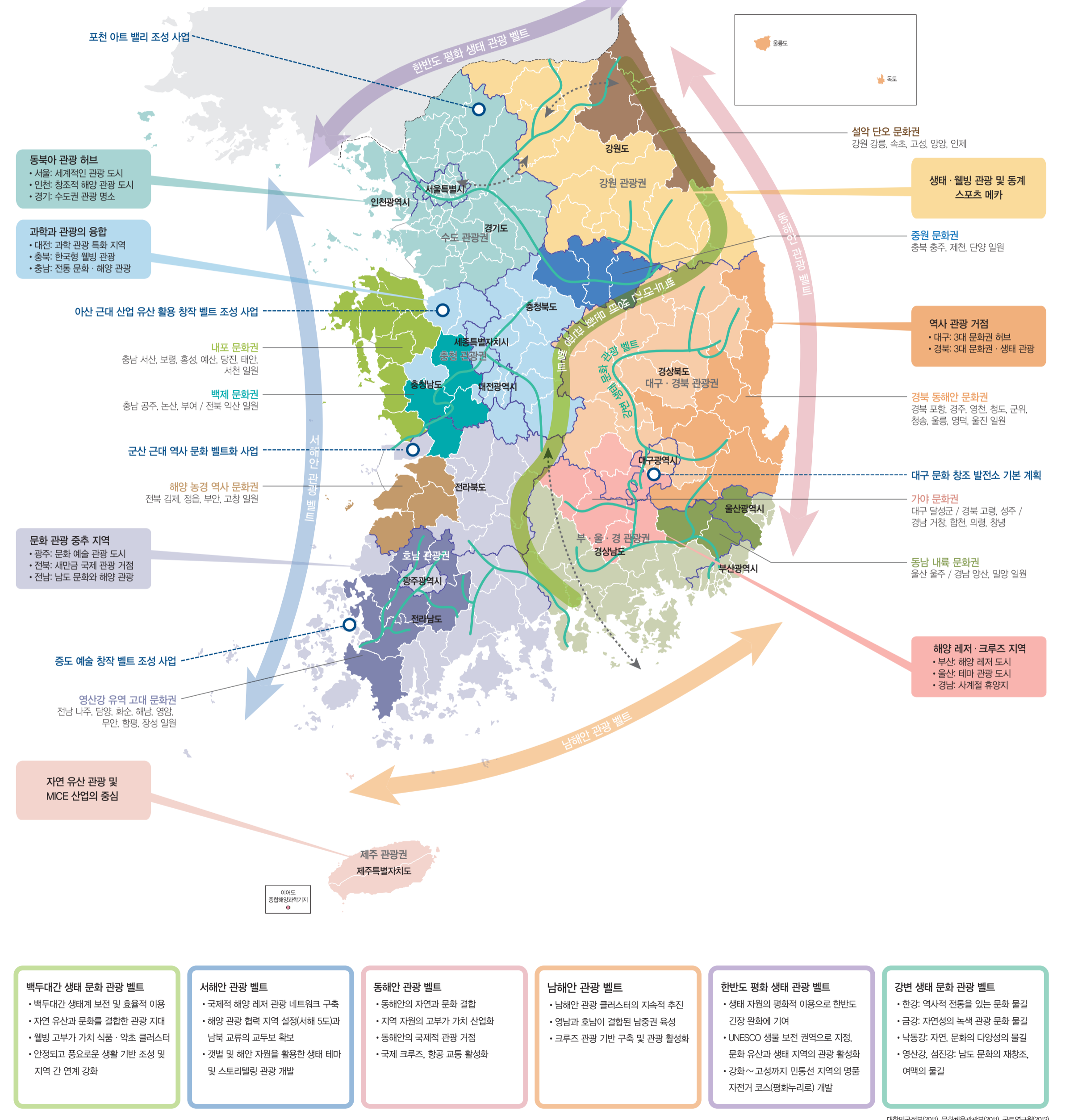
구분	전국 (7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구	시·군	지구	시·군	지구	시·군	지구	시·군	지구	시·군	지구	시·군	지구	시·군	지구	시·군
계	53	71	7	12	5	5	7	7	8	9	9	14	11	17	6	7
1차	7	16	탄광 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보은	청양	진안	산안	소백산 주변 (봉화·예천·문경)	지리산 주변 (하동·산청·함양)							
2차	7	11	영월·화천	영동	홍성	장수	곡성·구례	신의류양령 (영주·영양)	의령·함천							
3차	6	11	평창·인제·정선	-	태안	순창	정읍·진도	중서부 평야 (상주·의성)	남해·하동							
4차	6	10	양구·양양	-	보령	고창	보성·영광	안동호 주변 (안동·청송)	함천·산청							
5차	7	9	황성	단양·괴산	-	무주	화순·강진	동해 연안 (울진·영덕)	함양							
6차 (2007~2009)	6	6	고성	-	서천·금산	-	장성	영천·울릉	-							
7차 (2009~2010)	8	8	-	증평	-	남원·김제	함평	청도·군위·고령	거창							
8차 (2011)	4	4	철원	-	-	부안	고흥	성주	-							
9차 (2013)	2	2	-	-	부여	-	무안	-	-							

* 미지정 시·군: 안동·과천·예산·담양·경산·고성·홍천·옥천·정읍·해남·나주·영성·말양
 주: 인은 지구 기간 만료로 지정이 해제된 지구

제4차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에서는 문화·관광 자원의 특성 및 분포, 교통 접근성, 행정 구역 등을 고려하여 문화 관광 권역을 구분했다. 문화 관광 권역은 동·서·남해안 및 집경 지역의 광역 관광 벨트 및 백제 문화 지역·유교 문화 지역·지리산 등과 같이 특정 자원이 여러 행정 구역에 걸치는 광역 관광권을 문화 관광 특정 지역으로 개발·육성할 것이다. 또한 4대강과 연계한 유적

및 강변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여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하도록 했다. 제3차 관광 개발 기본 계획에서는 '다층적 지역 관광 발전 전략'을 도입하여 시·도 관광권과 더불어 5+2 광역 경제권을 관광 권역으로 수용하였으며, 6대 초광역 관광 벨트 설정으로 계획 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보완하였다.

7대 광역 관광권, 6대 초광역 관광 벨트 및 역사 문화 역량 증진 사업



백두대간 생태 문화 관광 벨트
 •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 및 효율적 이용
 • 자연 유산과 문화를 결합한 관광 지대
 • 웰빙 고부가 가치 식품·약초 클러스터
 •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 기반 조성 및 지역 간 연계 강화

서해안 관광 벨트
 • 국제적 해양 레저 관광 네트워크 구축
 • 해양 관광 협력 지역 설정(서해 5도)과 남북 교류의 교두보 확보
 • 갯벌 및 해안 자원을 활용한 생태 테마 및 스토리텔링 관광 개발

동해안 관광 벨트
 • 동해안의 자연과 문화 결합
 • 지역 자원의 고부가 가치 산업화
 • 동해안의 국제적 관광 거점
 • 국제 크루즈, 항공 교통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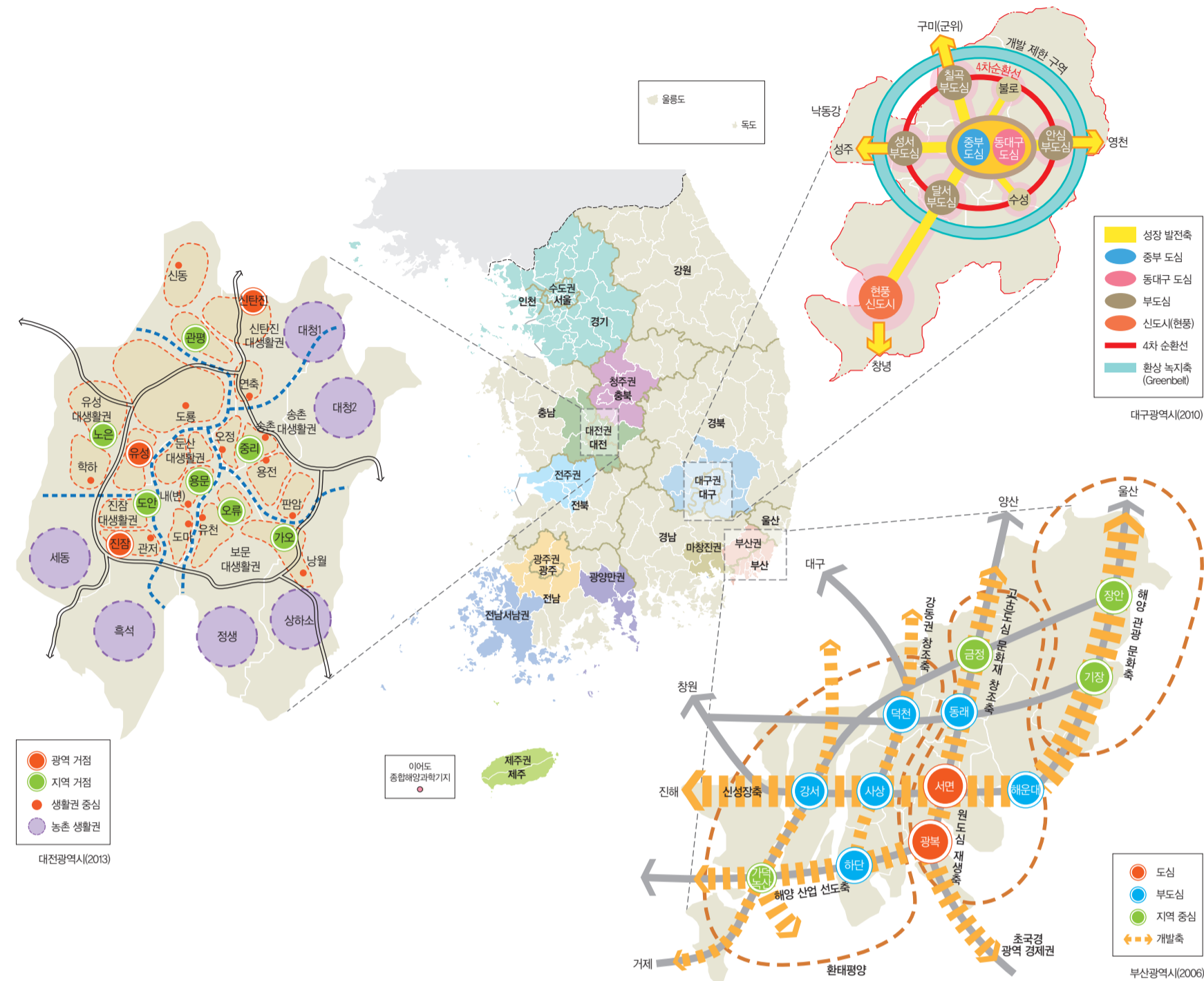
남해안 관광 벨트
 •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의 지속적 추진
 • 영남과 호남이 결합된 남동권 육성
 • 크루즈 관광 기반 구축 및 관광 활성화

한반도 평화 생태 관광 벨트
 • 생태 자원의 평화적 이용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
 • UNESCO 생물 보전 권역으로 지정, 문화 유산과 생태 지역의 관광 활성화
 • 강화~고성까지 민통선 지역의 명품 자전거 코스(평화누리) 개발

강원 생태 문화 관광 벨트
 • 한강 역사적 전통을 잇는 문화 물길
 • 금강 자연성의 녹색 관광 물길
 • 낙동강 자연, 문화의 다양성의 물길
 • 영산강, 섬진강, 남도 문화의 재창조, 여맥의 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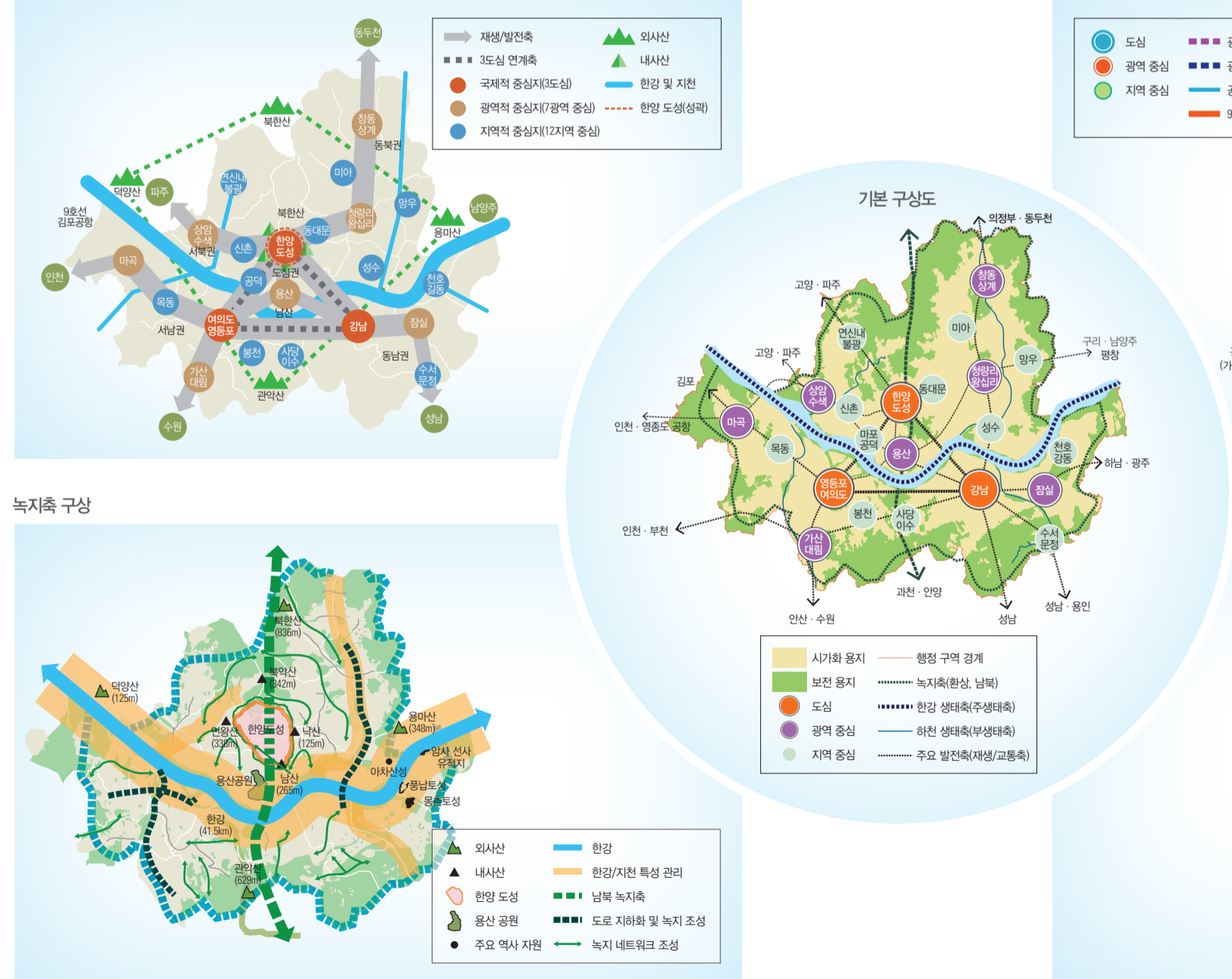
도시 계획

광역 도시 계획권 및 주요 도시 기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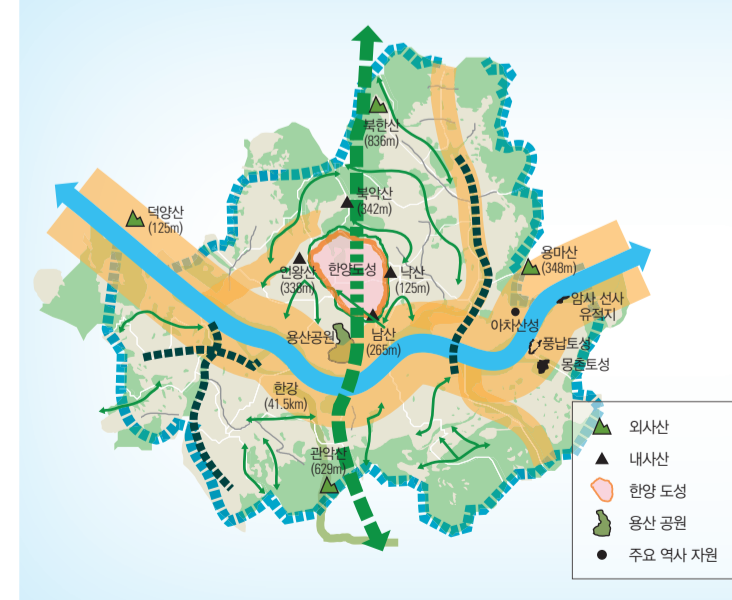


서울 도시 기본 계획

공간 구조 계획



녹지축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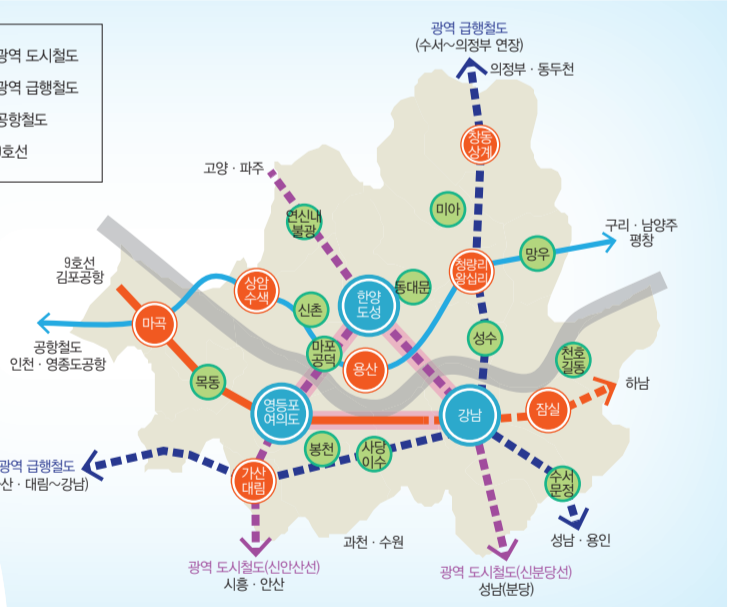
광역 도시 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행정 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적절한 성장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광역 도시 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도시 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며,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2013년 3월 현재 총 11개 권역의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었다.

도시 기본 계획은 계획 내용이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 개발·재정 등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 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국토 종합 계획·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공간 구조 및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의 보전 및 관리, 기반 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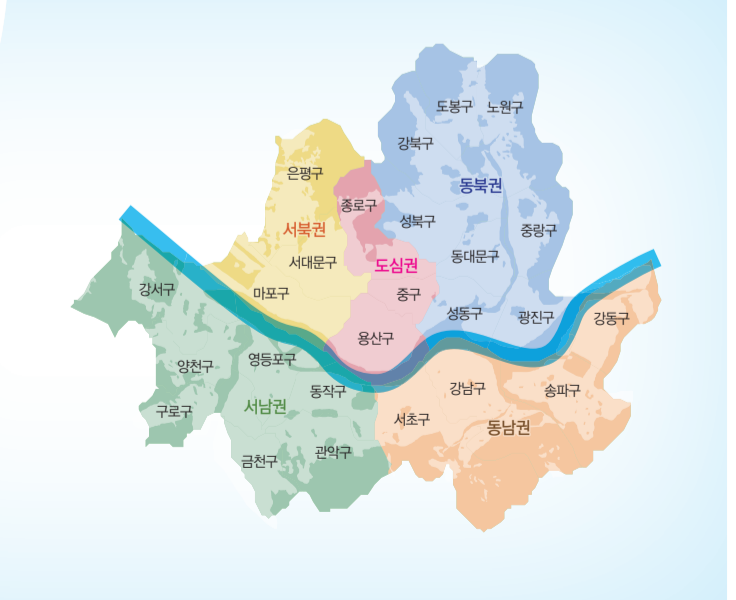
도시 관리 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 이용, 즉 건축 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 계획으로서 광역 도시 계획 및 도시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도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개발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다.

광역 교통축



생활권 계획



신도시 분포



일산



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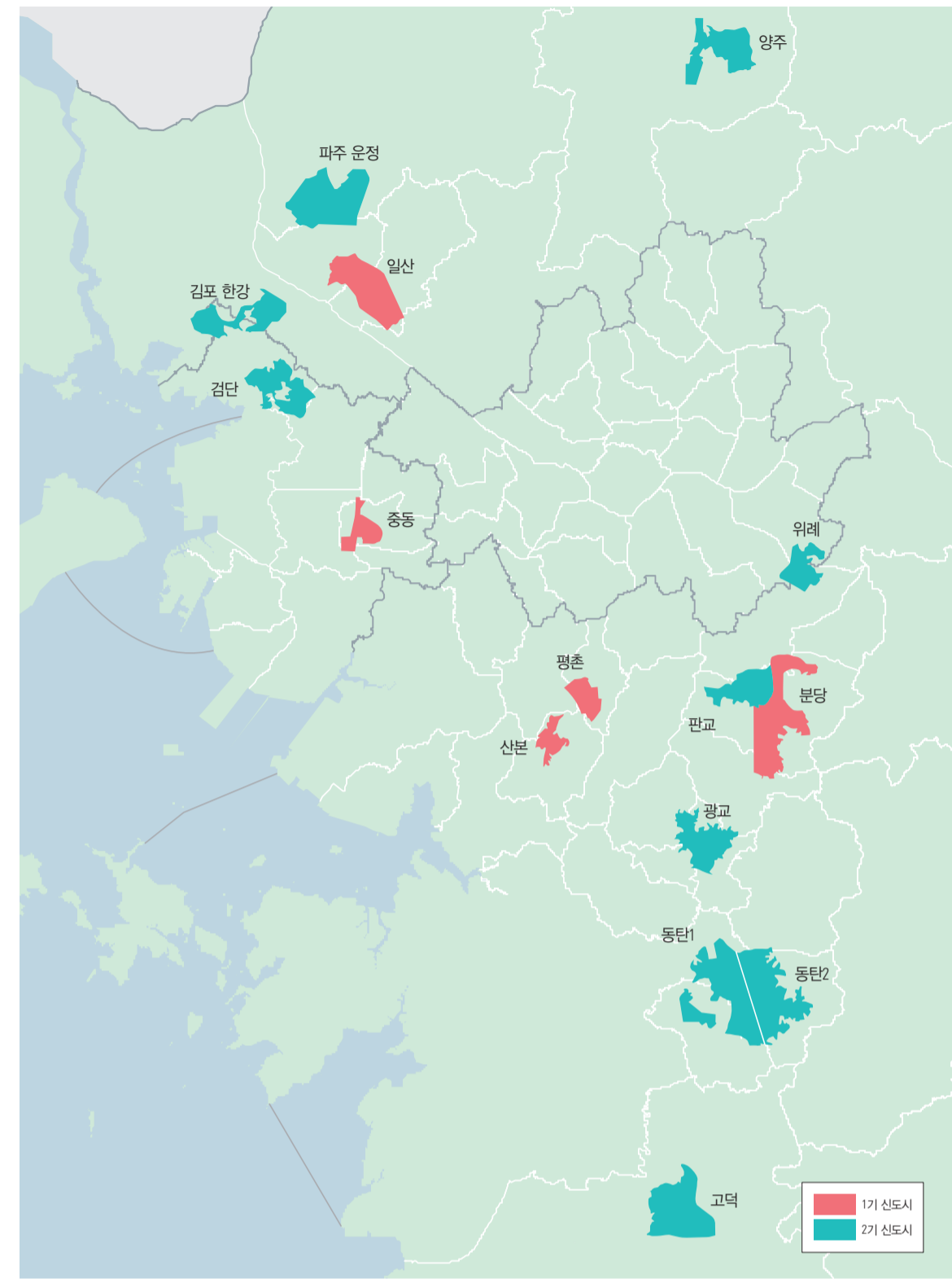
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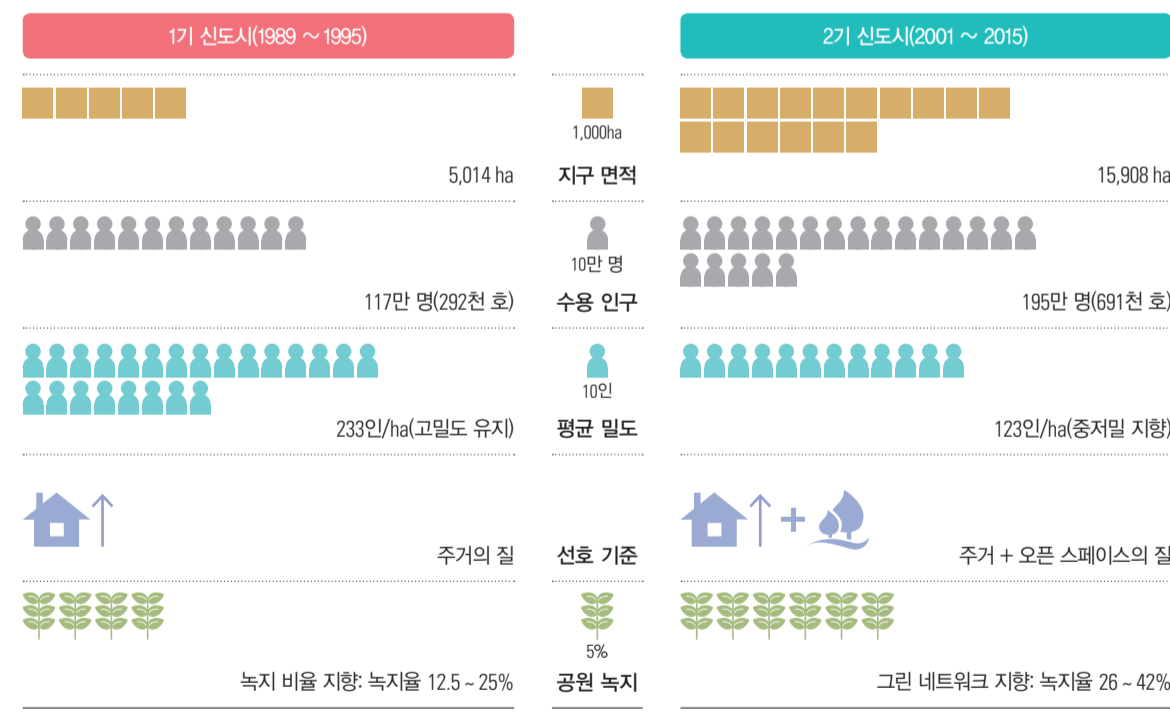
평촌



신분



1, 2기 신도시 비교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우리나라 신도시에는 첫째 국토 및 지역 개발, 둘째 대도시 문제 해결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광복 이후 1950년대 신도시 개발을 보면, 전후 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 형태의 도시 개발과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 방식 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1960년대에는 공업화 및 경제 개발 정책의 본격 가동과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최초로 건설되었다.

1980년대에는 목동과 상계동에 주택 중심의 도시 내 신도시(Newtown in Town)가 건설되었고, 특히 서울의 인구 분산 및 수도권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 즉 제1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아울러 대전 둔산 및 계룡 지구 등 일부 행정 기능 이전을 위한 신도시도 건설되었는데, 신도시 개발 수법은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영 개발이 주로 활용되었다. 1990년대에는 대규모 신도시의 일시 개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소규모 분산적 택지 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



판교



김포 한강



동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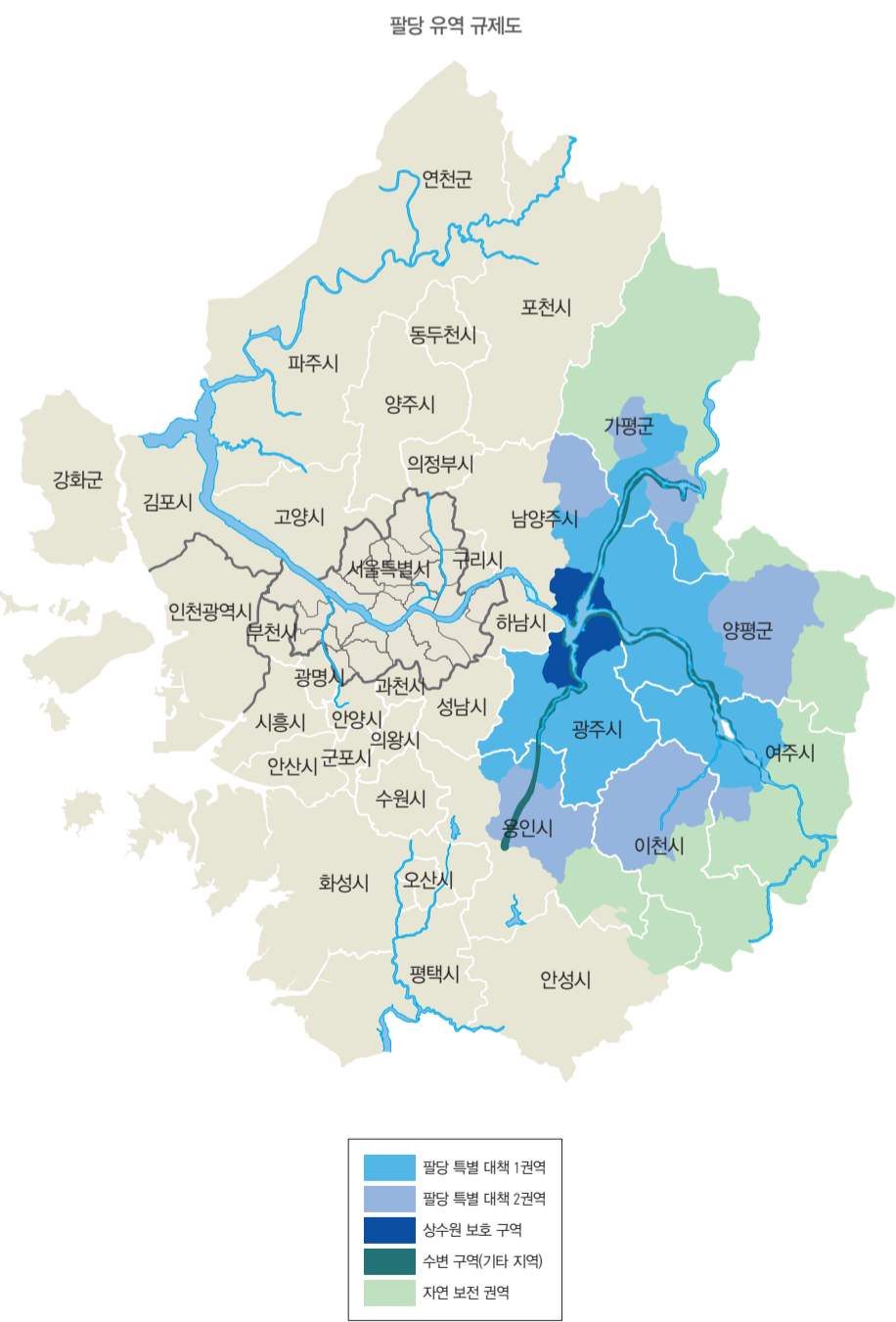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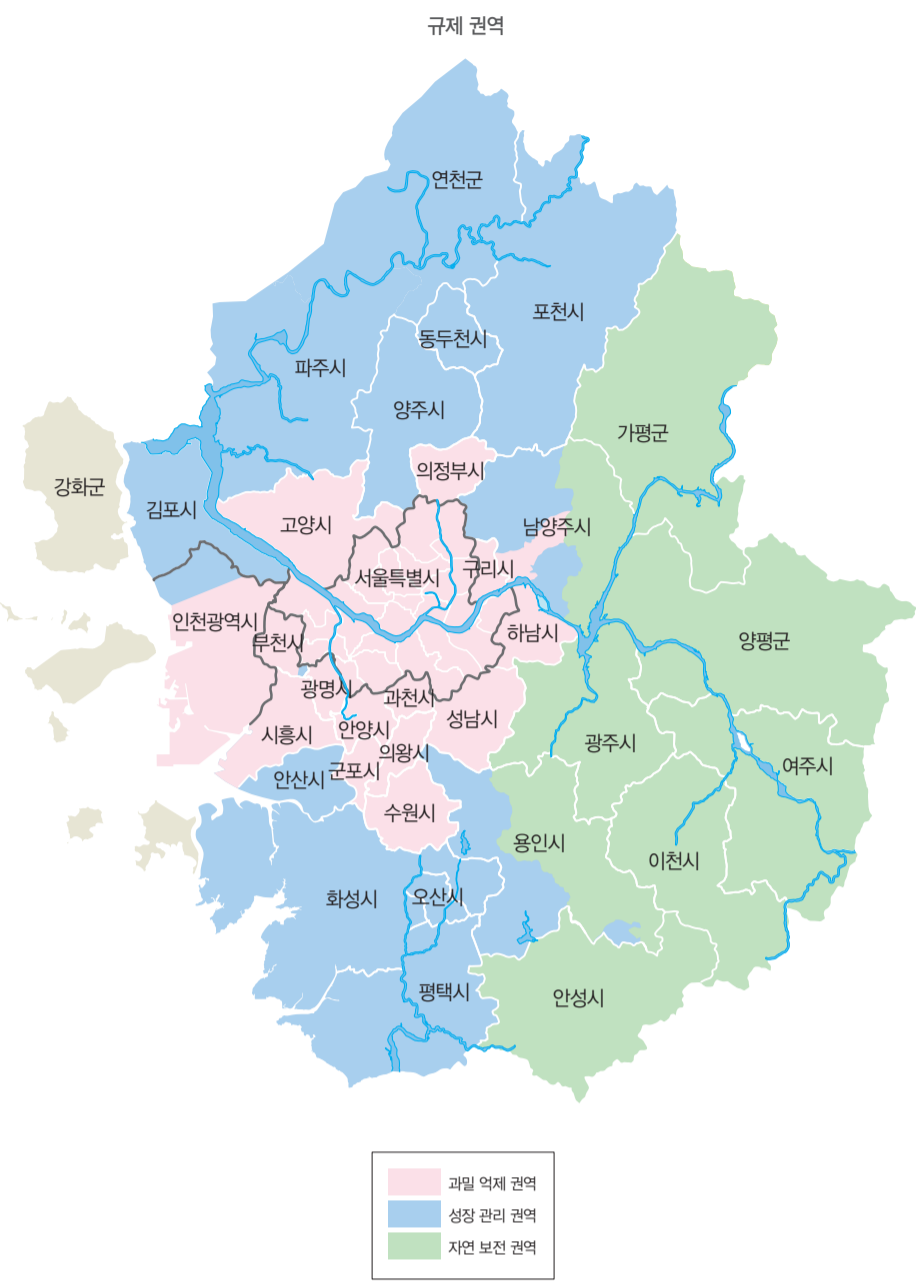
파주 운정



위례

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계획 없는 무분별한 개발(Development without Planning)에 따라 도로,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신도시 개발은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 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발 사례에는 판교, 동탄1, 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김단, 아산, 대전 도안 등 제2기 신도시가 포함된다.

수도권 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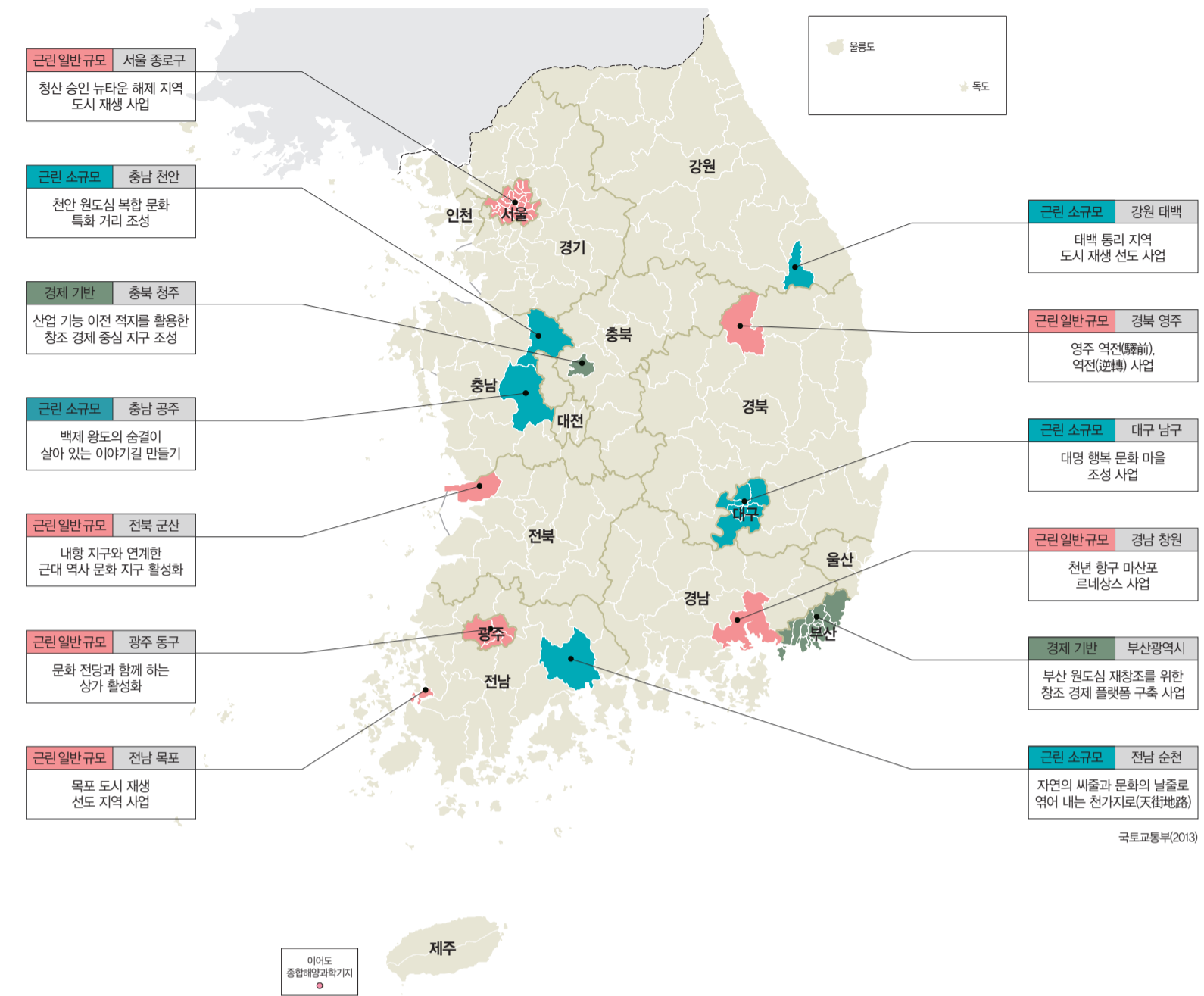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는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규제 내용으로는 대기

업 신·증설 금지(자연 보전 권역), 대학 신·증설 금지, 공장 용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제한, 공장 총량 등 공업 입지 규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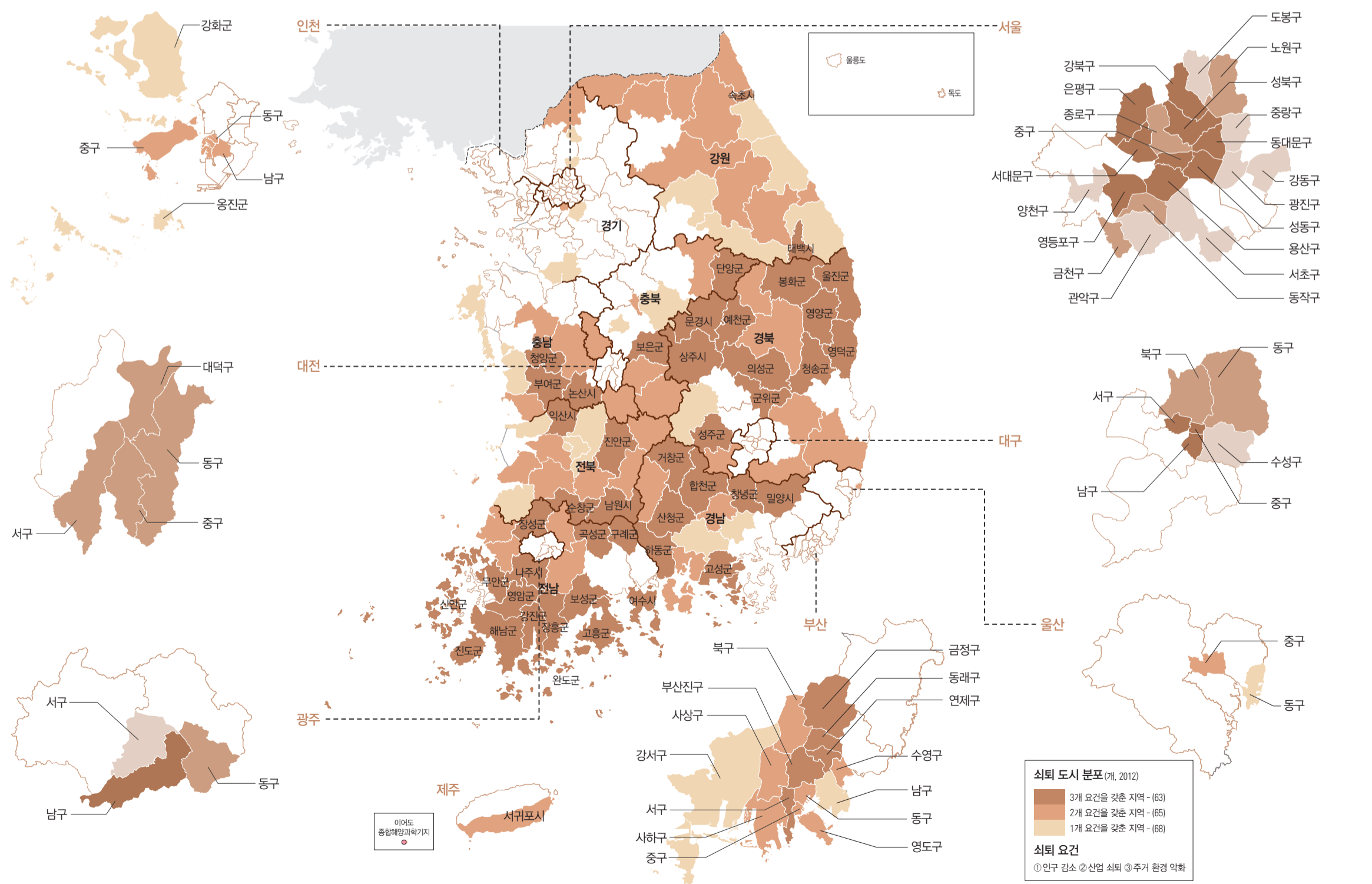
개발 제한 구역, 군사 시설 보호 구역 등 수도권 및 비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수질 보전 관련 발달 상 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수변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규제 등과 함께 적용되고 있다. 또한 수질 보전 관련 규제 지역의 경우 자연 보전 권역과 중복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도시 재생 선도 지역



도시 재생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는 2014년 4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13곳을 지정하였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 경제 기반형 선도 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 지역 및 주거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 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 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전국의 228개 시·군·구를 전 단계 ① 인구 감소, ② 산업 쇠퇴, ③ 주거 환경 악화 지역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도시 쇠퇴 진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①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 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며, ② 산업 쇠퇴 지역은 10년 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 최대치에 비해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 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이다. ③ 주거 환경 악화 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이다.